

제367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8 호

국회사무처

2019년3월22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14시05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서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이학재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대통령의 딸이 해외로 이주한 것이 아이를 국제학교 보내기 위한 것입니까, 남편 취업 때문입니까, 아니면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영애께서 프랑스에 유학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드님께서 중국에 가셨는데요, 그때 이렇게 문제되지

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재 의원** 아니, 대통령 가족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슬그머니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 매우 특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국민적 의혹이 발생했는데 왜 시원하게 말해 주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법·탈법이 있다면 그것이야 민정수석의 소관 업무가 되겠지만 일반적 사생활은 그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청와대에 건의해서 밝히라고 하세요.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동서인 김 모 교수를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처음 듣습니다.

○**이학재 의원** 김정숙 여사의 친동생 남편인데 이 김 모 교수가 작년 초에 모 대학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부 평가 부실 대학 분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가 김 모 교수의 영향으로 정상대학행 막차를 탔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 보도도 처음 봅니다.

○**이학재 의원** 이게 한 달 됐는데요. 이상한 것은 언론 보도가 난 뒤에 한 달이 넘도록 교육부도 청와대도 대통령 친인척에게 제기된 이 의혹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문제가 있었다면 밝혔으리라 봅니다마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학재 의원 아니,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했는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판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재 의원 총리님, 국민의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싹을 미리미리 자르는 것이 또 총리님의 역할이기도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결로 봅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학재 의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좀 잘 들어 봐 주세요.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 주는 문자서비스뿐이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게 누구…… 지금 의원님 말씀입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재 의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들어 보세요.

‘난 핵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 정부는 무정부 상태인 듯하다’ 이걸 누가 얘기했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재 의원 이 이야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인사들은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전 정부를 조롱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문재인 1번가’가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1번가?

○국무총리 이낙연 선거 때 뭔가 의견을 듣는 창구 아니었습니까?

○이학재 의원 예,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정책쇼핑몰입니다. 이 쇼핑몰에서 최다 구매를 한 1위 공약상품이 뭔지 압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그때 지방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선거에 제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지사였습니다.

○이학재 의원 ‘내 삶을 바꾸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1위였고 ‘좋아요’가 20만 5000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팔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표현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학재 의원 판매한 건데요?

총리님, 손주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학재 의원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아주 예쁜 손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직과 맞바꿀 만큼 아주 귀하고 예쁘지요? 그런데 총리님의 그 귀한 손주들을 어른들이 가둬 놓고 하루에 다섯 개비에서 일곱 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게 하는데 아이들은 울며불며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총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참 견디기 힘들겠지요, 할아버지로서.

○이학재 의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구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학재 의원 버클리 어스(Berkely Earth)라는 곳에서 지난 3월 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흡연량으로 환산을 하니까 하루에 무려 다섯 개비에서 일곱 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담배는 흡연자만의 문제인데 미세먼지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학재 의원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를 잡겠다.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지지한 엄마들이 지금은 미세먼지 없는 나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 가고 싶어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미세먼지를 팔아서 정

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환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 의원님께서 대선 때의 얘기를 주셨는데요 말하자면 그때도 이미 심각했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그것이 연평균 농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라든지 또 그 기간이 길어서 국민들께 특별한 고통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환경단체가 많이 순해졌어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학재 의원** 환경단체가 많이 순해졌다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학재 의원**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상 최악인 이번 미세먼지 대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달 초에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이었는데 이때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논평이 하나 없었어요.

왜 이렇게 순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쪽 단체 일을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학재 의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환경단체 보조금이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커다란 발목을 잡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38%가 2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 돈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순해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학재 의원** 또 전·현직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서 환경단체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환경 관련 고위직에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현 정권을 공동창업 했고 또 환경단체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이, 즉 이 정부와 정치적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해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글썽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기구에 그런 분들이 동참해서 지혜를 함께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에 통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완화되고 있지 않느냐 짐작은 그렇게 합니다.

○**이학재 의원** 총리님, 현 정권이 아주 건강해야 할 시민단체를 돈으로, 자리로 어용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시민단체들에 대한 모멸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학재 의원**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학재 의원** 환경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이 뭐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업장이 가장 많습니다, 한 40% 되고. 그다음에 건설기지에서 한 16%,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에서 한 14%, 그다음에 생활 영역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중국 얘기를 안 하셨는데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중국 내 발생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재 의원** 중국에서 미세먼지 많이 오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학재 의원**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세 차례 한중 간 정상회담이든 한중일 정상회담이든 거기서 미세먼지에 관한 우려를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거기서는 어떤 답변을 듣기보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 답변도 제대로 못 들었네요. 제대로 질문을 안 하니깐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거고요.

이것은 당당하다는 게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게 아니고 국내용으로 국내에 허세만 부린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뭐 외교적인 수사보다는 사실 한중 간의 미세먼지 문제는 실무적으로 어느 만큼 줄여 내기 위한 합의를 하고 또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또 실천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 미세먼

지가 한중 정상급 의제로 그렇게 다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전 정부에서 이미 다루었던 것 알고 계시나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학재 의원** 거기서 공동성명서까지 나온 것 알고 계시나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학재 의원** 상당히 뚜렷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이학재 의원** 장관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수도권은 미세먼지 1위가 경유차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경유차 대책은 뭐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작성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에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또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보조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21년까지는 기존 한 269만 대의 노후 경유차의 한 60% 정도를 저공해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후 경유차가 266만 대입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5등급에 해당하는……

○**이학재 의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1년에 15만 대씩, 올해의 예산으로 보면 15만 대가 폐차가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평균 17.7년이 걸립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래서 저공해 조치라는 것은 폐차뿐만 아니라 LNG차로의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이학재 의원** 아니, 그런데 이 노후 경유차만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경유차 총 몇 대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전체 차의 한 43% 정도 됩니다.

○**이학재 의원** 한 1000만 대 되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2300만 대의 한 4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학재 의원**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학재 의원** 그러면 지금 266만 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데 17.7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또 경유차들이 다 나이를 먹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노후 경유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발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십이삼 년 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유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사라지긴 뭐가 사라집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유차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이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어떤 혜택에 의해서 경유차를 더 많이 사게 되었던 겁니다.

○**이학재 의원** 이게 말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유차는 경유 가격이 싸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이학재 의원** 아니, 경유차가 늘어나면, 세상이면 뭐 하러 이런 약속을 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말씀드린다면 경유차 보급을 사실은 과거에는 장려를 했습니다, 이른바 클린디젤 정책으로. 그러다가 작년에 정부에서 정식으로 그 정책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의 전환이 일어난 시점이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닙니다.

○**이학재 의원** 완전 엉터리고요. 경유차를 줄여나간다고 했는데 경유차가 전체적으로 6%가 늘었고 경유 승용차는 10%가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것은 과거의 클린디젤 정책에 의해서 많이 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제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하지만 경유차는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줄이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

다. 따라서 저소득층 소유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라든가 차량 전환에 따르는 어려움을 좀 덜어 주는 이런 정책과 함께 꺾여 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 효과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학재 의원** 또 하나 여쭙볼게요.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조기 차 폐차하고 신형 경유차를 구매를 하는데 이래 갖고 경유차가 줄어들어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이학재 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런데 문제는 대안차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나마 등급이 높은 차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려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게 아니고요. 경유차 문제와 관련돼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첫 번째로는 경유차 생산을 금지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폐차지원금은 경유차가 아닌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는 휘발유차든지 친환경차를 사는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제작사가 경유차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하지 않으면 경유차의 미세먼지 정책, 이것 못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의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학재 의원**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일시에 줄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축 로드맵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학재 의원** 문재인 정부가 석탄화력 줄이겠다고 했는데 발전량이 줄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전력생산량은 25.4% 늘었습니다만…… 아, 11.4% 늘었습니다만 미세먼지는 25.4%가 줄었습니다.

○**이학재 의원** 발전량은 늘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학재 의원** 왜 늘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건 지난 과거 때 이미 계획되었든 혹은 또 진입을 했든 이 석탄발전사에서 많은 배출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재 의원** 원전 감축하려니까 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원전 감축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자, 그리고 지금 금방 미세먼지의 양은 줄었다고 하는데 미세먼지의 양이 준 것도 지난 정부에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설비보강, 부품교체 또 기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이것 해서 준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학재 의원** 현 정부에서 줄인 게 아니잖아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일단은 폐쇄도 여러 면 했고요. 그다음에 상한 제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NG발전소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태양광발전 1MW 하는 데 평균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건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이학재 의원** 어마어마하게, 1만 3000㎡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2030년까지 20%로 늘리면 얼마의 땅이 필요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말씀하신 대로 곱하기를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학재 의원** 그게 대책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70배의 땅이 필요해요. 우리 산림 다 파괴해 갖고 태양광발전 만들 겁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건 정부에서도 친환경성과 주민성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과 에너지가 상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태양광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학재 의원** 장관님, 현 정부가 2040년까지 3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돈은 얼마 됩니까, 예산은?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산은 아직까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이학재 의원** 아니, 계산 다 했잖아요? 320조가 들어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학재 의원** 이것 감당 가능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일단은 저희들이 그 감축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과 그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이학재 의원** 전기세는 얼마가 오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학재 의원** 아니, 이게 말입니까? 장관님이 이걸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하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모른다기보다는 그것은 저희 부에서 다루기보다는 산업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학재 의원** 원전으로 하면 태양광에 비해서 6배가 늘고 수명까지 하면 18배가 늘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전기세가 2배 이상이 올라요, 2배 반 정도가 올라요. 그것 모르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부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대답을 안 드린 겁니다.

○**이학재 의원** 장관님!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학재 의원** 여권의 정치적 동지들이 태양광 산업에 많이 관여돼 있는 것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활동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혹시 자기식구 챙기기 위해서 태양광사업 하는 것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제가 아는 많은 활동가들은 그야말로 대안 에너지운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제가 선무당 같은 이 미세먼지 정책 몇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광촉매 페인트, 페인팅 정책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효과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을 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만큼 미세먼지를……

○**이학재 의원** 전문가들이 효과 없다고 그래서 이것 못 하잖아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투입 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작년 1월 달에 서울시가 미세먼지 줄인

다고 그러면서 3일 만에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150억 쓴 것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효과 있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학재 의원**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있었으면 계속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차량 운행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려서 경차 같은 이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의 운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말도 안 되시는 말씀 계속하시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야외 공기청정기 설치, 환경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 효과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의 기술을 이용해서 일단 한국형 야외 공기청정기를 한번 개발해 보고 또한 실증사업을 통해서 실증이 있을 때 제한된 구역에서 고농도 기간 동안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학재 의원**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하루 만에 없었던 일로 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아닙니다.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학재 의원** 아니, 그래도 시행 안 할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것은 실증사업을 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학재 의원**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도 현 정권을 촛불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촛불혁명 이후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탄생한 정권이죠.

○**이학재 의원**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흠친 촛불도둑 정권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금시초문입니다.

○**이학재 의원**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 정권의 창업자들은 국민의 감성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지난 정권을 비열하게 조롱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했으며 그것을 기막히게 정치적으로 잘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현 정권이 국민의 분노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오늘 보신 바대로 국민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노력은 제대로 안 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권의 창업자들은 말끝마다 촛불정권, 촛불정권 하는데 저에게는 이 말이 촛불을 정권 창출을 위해서 잘 이용했다는 자랑처럼 들립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촛불정신은 폄훼되는 것이며, 이 정부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지속되는 한 시간이 갈수록 그저 선거 기술자들에게 속았다는 국민의 분노가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전 정부를 빗대어 했던 말씀을 제가 현 정부로 그대로 다시 읽어 보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 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이학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4전 5기, 인천 서구를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입니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최근의 체육계 성폭력 사건, 버닝썬 사건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은 성을 매개로 유착된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정관계 권력에 대한 건설업자인 재력가의 성 상납·수뢰 의혹이고 이를 권력이 은폐·묵인·비호한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김학의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지만 상식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 첫째는 몹시 문란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과 함께 모종의 검은 거래는 없었을까 하는 점이고요, 셋째는 그런 것들이 몽땅 모종의 작용에 의해서 은폐되고 비호됐다 하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의원 맞습니다.

화면 좀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말하자면 특수장간을 한 혐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사 결과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정관계, 재계, 법조계 인사들에게 성과 금품을 상납한 의혹이 있는 수뢰 의혹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이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점으로 해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무마·비호한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 이 부분은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지요? 물론 아까 수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그 수뢰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송치는 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보도에 나온 것만 보면 성범죄에 관해서만 무혐의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그러면 총리님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검찰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 결론을 지었는데 무슨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등의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신동근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 상납, 금전 공여에 대한 수뢰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통신사실 조회 등 영장을 수차례 청구한 바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가성 있는 성 접대로는 볼 수 없다 이게 무혐의 처리의 결론이었지요, 검찰에서.

그러나 제가 당시에 윤중천 씨의 사기행각과 그리고 또 김학의 전 차관의 지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상납을 했던 그 시기,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윤중천 씨가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었 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학의 씨는 그 관찰구역 이었던 춘천지검장이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정황 만 봐도 대가성 여부가 충분히 의심되지 않겠습 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반적으로는 의심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모르고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성 상납 및 금전 상납에 대한 수뢰 의혹 부분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성을 강간했나 안 했냐는 문제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화면 3.

장관님, 김학의 사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외압 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 지요? JTBC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신동근 의원** 그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인사검증이 있던 2013년 3월경, 아마 3월 1일로 되는 것 같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 가 당시에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직접 전 화를 걸어서 청와대 보고도 없이 이런 첩보를 다 루나라고 강력하게 질책했다고 그러는데 들은 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당시 수사라든가 아니 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업무 연락이나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 란한 상황입니다.

○**신동근 의원** 장관님, 그러면 당시에 민정수석 은 누구였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민정수석은 광상도 의원으 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그렇지요. 광상도 당시 민정수석 이었지요.

장관님,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고위 관계자, 고위 관계자라면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을 말할 텐 데 직접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질 책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글썄, 그러한 사실이 있었 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신동근 의원** 사건 공개기는 또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민정 수석 행정관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원장에게 김학 의 동영상의 감정결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것 으로 제가……

○**신동근 의원** 장관님,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 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국 과수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 다.

○**신동근 의원** 예, 맞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게 일개 행정관의 자의적 판단 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 다. 민정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저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러한 사실관계가 우선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기한 이 연장돼서요. 그 이후에 이 사실관계가 보고서 내용 중에 포함될지 여부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 니다.

○**신동근 의원** 보통 수뢰 혐의의 핵심적인 쟁점 은 상납 사실과 대가성의 여부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신동근 의원** 따라서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확인은 기본 절차지요, 그 령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의원** 장관님, 그런데 당시에 경찰이 이런 증거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경찰이 그 부분을 확보했 는지는 지금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근 의원** 없습니다.

이런 증거 없이 수뢰 혐의를 수사했다는 자체 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 검찰이 13년 3월부터 6월까지 김학의 사건에 대 해서 통신사실 조회 4회, 압수수색영장 2회, 체포 영장 2회, 출국금지 2회, 총 열 번에 걸쳐서 영장

을 기각했어요. 그중에서도 4건은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별장 영상의 원본을 갖고 있는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이었는데 기각시켰어요. 이 얘기는 경찰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조직적인 수사 방해지요.

당시에 수사관계자가 ‘검찰이 좀 더 협조적이었으면 김학의 사건뿐만 아니고 그밖에 많은 수뢰 사건에 대해서도 폭을 넓힐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 6을 한번 띄워 보세요.

장관님, 그런데 보면 이 사건 이후에 2013년 3월 28일 갑자기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퇴임합니다. 물론 이분은 MB 정권 때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11개월밖에 안 됐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2년 임기라고 했을 때 유임되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 이후로 퇴임시켰어요. 그리고 그 뒤로 2개월에 걸쳐서 김학배 당시 경찰 수사국장, 이세민 수사기획관, 반기수 범죄정보과장, 이명교 특수수사과장 모두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조치했어요? 보세요, 핵심 부처에 있다가 경찰대 가서 학생지도부장으로 학생 지도하라는 이런 좌천성으로 한 겁니다.

이처럼 경찰청장과 수사 핵심 라인을 전부 다 좌천시킨 건데 경찰이 김학의 사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의견상 그렇게 보이는데 경찰의 인사 내용의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동근 의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수사 지휘라인이 사실상 공중분해됐어요, 수사팀 자체가. 결국은 강일구 경정 혼자 남아 가지고 이 수사 뒤치다꺼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경찰 수사 라인을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권력은 적어도 민정수석실 이상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사 사건으로 선정을 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신동근 의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끝까지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신동근 의원**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학의 사건은 철저히 조직적으로 은폐·비호됐습니다. 박근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경찰이 수사 인지를 하자마자, 당시에 인지를 하고 나서 검찰이 이걸 뺏어 갈까 봐 경찰은 특수수사부에서 이걸 감추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을 질책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소리지요. 그다음 국과수에 찾아가서 김학의 동영상 감정 결과 부당하게 내놓으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수사 라인을, 수사팀을 완전히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광산도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민정수석의 행태가……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해 봐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하여튼 이 부분……

○**신동근 의원** 아까 그 화면 계속 띄워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의원** 장관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 7년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신동근 의원** 남아 있습니다.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진상조사단에서 어떤 건의를 하거나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그리고 장관님, 만약에 장관님을 보좌하는 현 차관이 성 상납, 금품수수, 성폭행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는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받고 또 엄중하게 조치하겠지요? 그게 정상적이지요?

대답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자체도 굉장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동근 의원** 아니, 장관님의 입장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지요.

○**신동근 의원** 당시 법무부장관 누구였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황교안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그런데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본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화면 8 줌 띄워 보세요.

2013년 6월 20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수사,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국감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규명된 대로 처리하겠다’ 그래 놓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그해 11월 11일 날 검찰은 제1차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이것 완전히 장난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해서 2차 수사가 들어가니까 2014년 7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아마 서영교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성 접대 피해 여성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지도하겠다’ 이랬어요. 그래 놓고 그해 12월 31일 2차 무혐의 합니다.

몰랐다고 발뺌하기에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고, 몰랐으면 직무유기고 알았으면 묵인·방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장내 소란)

조용히 해 봐요.

저는 수사 지휘라인 선상에 있는 황교안 전 장관, 광상도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진상조사단의 조사 보고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당시 이러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과거사 사건으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김학의 사건이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검경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대통령도 ‘국민의 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검경의 명운을 걸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신동근 의원** 그래서 여론조사 보면 67%가 거기에 찬성하고 또 72%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

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경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하면 과연 재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데 공수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특임검사라도 임명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수사할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수사절차가 뭐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 장관님, 과거사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권고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신동근 의원** 그러면 언제 재수사에 착수할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아직 그러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고……

○**신동근 의원** 진상조사단이 강제수사권도 없고 또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특정 혐의를 파악했다면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즉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들어가시라고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신동근 의원** 죄송합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학의 사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즉시 재수사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교훈을 얻을 때 비로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로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정의로 보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김수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팩트를 중시하기 보다는 감정이 앞서 성별, 세대, 직업, 이념, 자본

등 편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편을 나눠 혐오 발언을 쏟아 내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자본이 가진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고, 오랫동안 축적돼 온 불평등 앞에 계층 사다리는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불확실성이 상수인 시대 혁신과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승자가 아니라 와해되는 하향 산업의 피해자를 더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우리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준비한 PPT를 봐 주십시오, 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각 시대에는 해당 세대를 표현하는 사회적 단어들 있습니다.

첫째 줄 민주화 세대,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등등 아마 총리께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 기재돼 있을 것이고요. 그 밑에 달관 세대, 흡수저 세대, 헬조선, 이생망 또 이것 외에도 88만 원 세대, 다크 밀레니얼 세대, 이생망 세대, 인구론 세대 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 있습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단어들 위 칸과 아래 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 전번 화면이 그냥 지나가서요. 어떤 차이입니까? 이 전번은, 위에 보이는 민주화 세대다 하는 그런 말씀은 뭔가를 위해서 열정을 태웠다 하는 긍정적인 용어들이 많은 것 같고요, 아래는 좀 절망적인 또는 냉소적인 표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맞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단어들 이처럼 하나같이 비탄과 절망에 찌들어 있었던 시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웰빙’이라든가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카피처럼 모두가 잘 먹고 잘살자라는 메시지가 오르내렸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일말의 희망을 논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우리 사회는 지금 빈부 갈등과 계층 갈등, 지역 갈등을 넘어서서 청년들 사이에 젠더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복합적인 변화에서 오는 불

편함, 고통 또는 좌절감이 뭉쳐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의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역시 우리 사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일 시급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수민 의원** 총리님, 정부가 채용 비리 방지 하겠다고 국민들께 이제까지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것 한두 개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채용 비리, 적어도 공공기관에 관해서는 전수조사를 이미 했고요, 현저한 잘못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김수민 의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첫 국감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가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때 정부가 말씀하신 전수조사 그리고 무관용원칙,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비리 연루자가 구치소에 가 있었는데도 월급이 나갔다는 보도 앞에서는 성과급을 환수하고 비리 청탁자에 대한 실명과 신분 공개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정부, 약속했던 비리 연루자의 성과급 환수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그 후에 발생한 또는,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혹시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아봐야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성과급 환수 아직 안 하셨고요.

총리님, 최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인 유암코 상임 인사로 내정되었고요, 30대 후반의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또한 정부하고 관련이 없는 금융지주 상무로 갔습니다.

정부 지분이 한 푼도 없는 금융회사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한 낙하산 인사가 자행됐다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세간에서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마는 소관 기관에서는 업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 습니다.

○**김수민 의원** 청년 체감 실업률을 몇 %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체감 실업률이 22%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계상의 실업률은 9%대입니다.

○**김수민 의원** 오늘 자로 체감 실업률이 25%를 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는 못 해도 적어도 뺏지는 말아야 할 텐데요.

9년 전에 30대 후반의 청와대 제2대변인이 KT 본부장급 전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위인설관, 특혜성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와 또 정부의 솔선수범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리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김수민 의원** 보건복지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구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영역에 관련해서는 연금에 대한 부담, 현재 일하는 세대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의원** 지난해 12월 달 장관께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수민 의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연금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였던 것은 실천 가능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작성하는 것 그것이 연금계획안을 작성한 데서 가장 유의한 사항입니다.

○**김수민 의원**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의 입장을 끌고루 들어서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내용 어디에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세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연금에 있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아마 소득대체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보면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현재 연금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의 기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의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장관님의 역할 아닙니까?

장관님, 이제까지 정부와 국가가 미래를 잘못 예측했고 또 제도 또한 잘못 설계했다는 지적과 비판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그간의 무능과 무책임의 부담을 미래 세대가 지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소진이 되고 그리고 그 일정 시기를 넘어서면 부과 방식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1986년에 연금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 설계의 기본 도구가 되었던, 가장 큰 참고 자료가 되었던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도 이미 그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명기가 되어 있는 것 이외에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인지를 여쭙본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번에 제안된 4차 연금계획안에는 현실적인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지금 어쨌든 각각의 세대가 양보와 조정을 통해서 계속 타협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전체 유권자 및 경제활동인구 중에 2030세대가 35%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위원 17명 중에 2030세대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어떤 특위를 말씀하십니까?

○**김수민 의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 노사정위원회 말씀이시군요.

○**김수민 의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젊은 층을 대변하는 사람이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2명입니다.

장관님,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연금개혁특위에 청년 몫을 더 배정하도록 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에게 제안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아마도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두 번째로 제가 장관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 청년크레딧 신설입니다. 20대의 청년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납입액을 지원을 해서 전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연금의 크레딧은, 전 계층에 크레딧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크레딧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산이라든지 군 입대라든지 특정한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경우에만 크레딧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크레딧을 주는 것은 크레딧 원 제도의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의원** 저는 지금 현시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내고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허점과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크레딧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연금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보험 방식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특정 계층의 국민들이 소득이 모자라거나 어려울 때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도 있을 수 있고 긴급지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부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하고 있는 동안 번 소득을 기초로 일정률의 보험료를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도를 움직이는 것이 제도의 가장 큰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상반하는 제도를 도입한

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성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 세대, 청년 세대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로 갈수록 이 불리해지는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보험 방식이 아닌 공공부조 방식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저는 각 세대가 처하는 소득의 유무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원리에 맞게 제도를 새롭게 창설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국가의 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50년 후, 100년 후가 그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수민 의원** 국가의 전체 세입과 세출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 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또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청년인지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영향평가라든가 청년인지예산 한꺼번에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의원** 이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님께 여쭙본 거고요.

체계적인 청년 정책 수립에 대한 총리님의 소신과 신념 감사드리고 꼭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들어가……

○**국무총리 이낙연** 예, 법 개정 이전에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김수민 의원** 환경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미세먼지 대책부터 쓰레기 처리

문제까지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킨 것처럼 대기에 유해한 각종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 또한 그 환경에 주는 영향을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건립 허가라든가 배출의 기준을 강화해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김수민 의원** 범정부 차원의 고민과 대책이 조금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전국의 각 지역민들의 피해와 또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전체 국민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전국의 쓰레기 처분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들어 봤습니다.

○**김수민 의원** 제가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환경상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취영향물질 발생, 온실가스, 토사유출,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소각재 낙하, 생활폐기물·분뇨 발생, 폐유, 위생·공중보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요. 자연생태환경 또한 악영향을 받는다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이것보다 얼마나 더 악영향을 끼쳐야 사업을 불허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은 일단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저감방안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그 사업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향이 있다 해 가지고 그 자체로서 사업의 가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김수민 의원** 장관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기본원칙을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각장이나 폐기물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소각장 건립 설명회가 열리는지 알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든 청주 지역을 말씀드리면

인구 21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이 주민설명회에 12명밖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청회도 열리지 않고 있고요. 결국에는 업체 등 소각장을 추진하려는 쪽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딱 한 번만 하면 그냥 그 이후의 일련의 절차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법 규정이 현실과 시민들의 의식을 전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개정을 검토하는 적극성을 환경부가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지금 정부입법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시행령은 정부에서 개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 의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일단 현행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의 규정에서는, 특히 초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규정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느냐, 저는 운영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의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수민 의원**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이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 법 규정의 미비함을 악용한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시거나 개정을 검토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말씀하시지요.

○**김수민 의원** 장관님, 제가 환경부장관께 질의했던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의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과 업체 간 갈등의 가장 흔한 소재입니다. 이 지역 청주에서 소각장을 추진하는 업체와 일부 주민들 사이에 수억대의 금품이 오간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설치업체가 돈으로 환경을, 건강을 사고파는 행위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소각장 처리시설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는 주

만동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텐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저도 의원님처럼…… 이런 부분들이 주민하고 충분한 소통 없이는 또 진행되지도 못합니다, 우선 집단민원 때문에.

○**김수민 의원** 예, 국회입조처, 국민권익위에 확인 결과 돈을 주고받는 이러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고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를 통해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서면에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착수 등 법적 조치 가능하다고 기재됐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확인해서 수사 착수를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아직까지는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접수되면 당연히 순리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이와 마일리지를 합성한 ‘나일리지’라는 신조어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장자의 기득권, 젊은층의 불만이라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몇 년 전부터 헬조선·이생망 같은 수많은 신조어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신조어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 다양해지고 대립은 더욱 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조어와 유행어를 재미있게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정부와 정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김수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을 출신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화요일 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부울경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취지로 답변드렸습니다.

○**윤재옥 의원**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시면서 총리실이 조정 중인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서 부울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국토부와 조율이 잘 안 되면 조정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대구……

○**윤재옥 의원**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하고 지금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지자체 또는 지방과 중앙정부의 담당 부처 사이에 의견이 달라서 조정이 안 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됨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구공항의 경우는 대구시와 국방부의 얘기를 따로따로 제가 들었는데 얘기가 서로 달라서요, 그래서 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양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보라 했고요.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김해 신공항의 문제는 부울경 검증안이 국토부에 제출되면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마는, 엇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 사이에서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떠안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부울경 사이에 끝내 조정이 안 된다면 조정의 역할은 결국 총리실이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이 두 문제는 그 쟁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지금 국방부하고 이전 사업비 문제가 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아니라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갈등 끝에 정리된 국책사업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좀 더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조정을 한 것처럼 이 부울경과 동남권 신공항 사업도 총리실에서 조정에 나서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또 갈등의 정

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은데 그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시니까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국무총리 이낙연 동일선상까지는 아니고요. 의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요컨대 중앙정부의 부처가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그 일은 국무조정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윤재옥 의원 그러면 총리님께서 언급하신 조정의 의미가 부지 재검토까지 포함된 의미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한참 뒤의 얘기지요.

○윤재옥 의원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물론입니다. 부지는 한참 뒤의 얘기고요, 어느 특정 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윤재옥 의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에서 공공기관 불법 점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불법 점거는 1건에 불과했고, 박근혜정부 때는 1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스물두 번이나 민주노총이 공공기관을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법질서가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윤재옥 의원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공공기관을 이렇게 쉽게 점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법질서를 가버이 여기는 그런 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그렇습니다.

또 현장의 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도 시위대하고 부상이 생기면 사표를 낼 그런 불상사도 생기고 또 재판에 걸리면 돈을 물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무능한 경찰로 욕먹는 게 낫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질서가 한번 무너지면 새로 다잡기가 상당히 시간 걸리고 비용이 드는 문제입니다. 총

리님께서 이런 현장의 문제를 조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저께 답변 과정에서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총리께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의원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만약에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따져 보고 지휘 책임은 혹시 잘못이 없는가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옥 의원 총리님 답변 취지와는 달리 이 사안에 대한 경찰청 감사 결과를 보면 경찰서장을 감봉 1월 조치하고 관할 지방청 상황실을 경고하는 수준에서 징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보면 ‘피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쉬우나 피해 현장 진입을 못한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현장에 무슨 가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이 난 것도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경찰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들어가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국민을 구출해야 되는 게 경찰의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 결과를 내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지금 총리님 뜻하고 다른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도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상당히 미온적인 대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윤재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권력이 약화되고 불법 집회·시위가 늘어나는 그 이유 중에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 강정마을의 구상권을 포기했고요. 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거의 지금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권조정을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번 3·1절 특사에 보면 법질서를 위반해서 불법시위사범을 107명이나 사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의 법 집행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상당 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장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일정한 기간에 처벌받은 분을 사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수용했다면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불 적에 사면 가능하고 그것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 집행을 흐물흐물하게 한다든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엇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실정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엄정함을 잃어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옥 의원 그런데 지금 이런 현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기습시위를 했어요. 공당의…… 종전에 전혀 이런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규탄 기자회견 첩보를 알고 있었고 현장에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입을 해서 1시간 동안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공권력이 지금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님,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경찰 책임자에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정치깡패들에 의해서 전당대회가 방해된 적은 있지만 노동단체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묵인되고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옥 의원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재옥 의원 백두청송위원회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 개인적인 첫 느낌으로는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옥 의원 지나치다고 느끼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재옥 의원 지금 지나친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186건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김정은 칭송 글로 도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풍자와 유머를 구사하는 여유형 리더십’이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밀유도체계를 도입한 지대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후 ‘저 정도의 명중 정확성이면 적들의 눈알도 파 먹겠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이 말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이가 풍자와 유머를 구사하는 여유형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은 186건 다 참 입에 담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고발되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진행을 좀 챙겨 주시고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가, 평균 1년에 한 60건 정도를 전 정부에서 했었는데 15건 정도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옥 의원 4대강 보 철거 최근에 발표를 하셨지요, 특히 금강 영산강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재옥 의원 총리님, 이게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정부의 최종 정책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물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윤재옥 의원 그런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위원 43명을 조사를 해 보니까요 우선 조사 결과 확인되는 것만 해도 43명 중에 4대강 사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친정부 인사로 누가 봐도 판명될 수 있는 사람이 22명이나 됩니다. 절반 이상이 이미 성향이 드러난 사람이예요. 조사 과정에

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반론적으로 각 부처 소관의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공정성에 오해가 없도록, 공정성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하라는 얘기는 제가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부처에서는 지금 안일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4대강 반대 ‘녹차라떼 드실래요?’라는 서적을 쓴 환경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오체투지까지 하면서 4대강 반대하던 시위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위원장도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을 결성하신 분이구요. 4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부 4대강 반대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갈등 과제 아닙니까? 16번째지요? 총리실에서 관리하는 16번 갈등과제예요.

총리님, 갈등과제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갈등이 확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요 하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마는 환경부 산하의 위원회는 어쩐지 환경운동가들이 많이 들어가고, 산업부의 위원회는 친기업적인 인사들이 많이 계시고, 고용노동부의 위원회는 친노동적인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옥 의원 위원 구성도 그렇지만 지금 불성실하게 조사·평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민간 전문가 43명 중에 기획위원을 빼면 35명인데 이 35명이 열 번 정도의 회의에 세 번도 참석 안 한 사람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도 2명이고 한 번만 참석한 사람도 3명이고…… 도대체 이 회의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윤 의원님의 그러한 문제 제기도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옥 의원 그리고 발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듣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보도된 것을 중심으로 듣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그러니까 유리한 지표만 사용하고 또 조사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물을 방류하기 전후를 비교해 가지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예 보를 설치하기 전 데이터하고 보 설치 이후의 데이터하고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더군다나 총리실에서 관리하는 갈등과제이고 민감한 문제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공감하고 따르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다만 의원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보도했던 언론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논리와 똑같기보다는 4대강에 찬성했던 언론들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비할 수 있다고 보고요, 환경부나 그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행안부장관님.

장관님, 지방선거 앞두고 지난번에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대한 수사 착수 보고를 받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착수 보고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언론을 보고 파악을 했다가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지요.

○윤재옥 의원 선거 앞두고 광역단체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주무장관까지는 보고가 돼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런데 의원님 아시겠습니까마는 주무장관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다만 경찰청장한테,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체 요청은 경찰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윤재옥 의원 문제는 경찰청장한테도 보고가 안 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착수가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된 압수주색영장 집행에 대해서 당시에 보고받았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일반적인 보고는 받았습니까.

○**윤재옥 의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옥 의원** 보고만 받고 말았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보고만 받았습니다.

○**윤재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전청장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이미 검찰의 결론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발언의 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재옥 의원** 김학의 수사와 관련해서 2013년 3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체포영장 두 번, 압수수색영장 두 번, 통신사실 조회 네 번, 출국금지 네 번, 총 열 번이 기각된 것 알고 계십니까, 검찰 단계에서?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윤재옥 의원**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윤재옥 의원** 당시 수사 초기의 검찰총장은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당시에, 이 사건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초기에 채동욱 총장이었고요.

○**윤재옥 의원** 중앙지검장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중앙지검장은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윤재옥 의원** 그러니까요 서면질의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요. 그 당시 중앙지검장하고 담당 부장하고 주임검사 그게 보안 사항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의원** 빨리 제출하시고요.

또 지금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그 당시 법무부장관하고 민정수석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아직 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윤재옥 의원** 중간보고 받은 과정에서 그런 사실관계 확인된 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중간보고 받지 않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윤재옥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쨌든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 확인된 건 없네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없고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윤재옥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될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전체적으로 진상보고서가 나와야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전에 보통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재옥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정부질문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는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윤재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출신 오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무마 사건 경과를 보면, 2012년 11월이었습니다. 경찰은 권 모 씨의 강간 사건 신고 수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 민정수석은 김학의 인사검증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일 날 경찰청 수사국장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했다는 기사를 봤

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7일 날 경찰은 민정수석실의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가서 직보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일일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면 이런 강간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지명 절차를 건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라면?

○**법무부장관 박상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월 7일 날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에게 경찰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직보를 했고 그렇다면 당시 민정수석도 이 내용을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일반적으로는……

○**오영훈 의원**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보겠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오영훈 의원** 그러면 당시 법무부차관을 내정하려고 하면 당시 법무부장관에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훈 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은 되지만 확인할 수는 없는 바입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간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법무부차관에 3월 13일 날 내정이 되고, 그 이후에 3월 21일 날 사퇴하게 됩니까라는 내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상당히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는데요. 특정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글썬요. 그런 사실관계가 만일 확인이 됐었다면 좀 의아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버닝썬 사건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경우에 단순히 해당 지역 경찰 일부와 유착된 일부 연예인의 일탈행위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크게 보면 YG 엔터와 박근혜 정권의 연계가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글썬,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어떤 확장된 전체 범죄의 모습을 상정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인터넷과 언론에 제기된 기사를 재구성한 관계도 화면입니다.

아까 신동근 의원이 제기했던 김학의 그리고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법무부장관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연결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인사절차가 강행되었는지, 그 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버닝썬과 관련해서는 승리라는 연예인이 매개가 돼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양민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지난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차은택, 조운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버닝썬에 보면 최초 폭행자가 서현덕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서현덕은 최순실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당시 빅뱅의 가수지요 승리, 지금 현재 버닝썬과 연관이 된 승리 그리고 2NE1과 연관이 된 박봄 다 법무부 홍보대사였습니다, 법질서 홍보대사. 알고 계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이걸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고요.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당시 박봄과 관련된 마약 밀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언론에 보도된 것……

○**오영훈 의원** 화면에 보시는 대로 대기업 일반 직원과 박봄의 처리 상황을 비교해서 내준 겁니다.

29정의 밀수입 그리고 82정의 암페타민 밀수입 그리고 3일 만에 체포-구속 그리고 한 달 더 이상, 50일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내사중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마약 밀수 사건의 관할 지청이 어디였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당시 관할 지청이 인천검찰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사장은 김학의 검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김학의 검사장이 당시 법무부의 홍보대사로 연계된 빅뱅과 그리고 2NE1 그리고 YG로 연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김학의와 YG, 버닝썬에 대한 내용을 통틀어서 ‘최순실 게이트다’ ‘최순실 게이트 시즌 2다’ ‘연예계 농단 사건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알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3 특별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은 1948년, 1949년 당시 불법 수형인으로 감금되었다 생존하신 분들의 재심재판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오영훈 의원** 공소기각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당시 무죄보다 공소기각할 수밖에, 검찰에서도 공소기각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여덟 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그것은 제주 4·3 사건 처리절차의 법적인 하자,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지금 생존 수형인은 91명에 불과합니다. 당시 수형인 명부에는 2530명의 명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생존자를 빼면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괄구제의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

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7년 12월에,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내용에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조항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그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가배상 등 그 제도와 관련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오영훈 의원** 독일의 경우에 나치 불법판결 파기법률 제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기초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오영훈 의원** 다음은 행안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지난해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4·3 특별법과 관련해서 4·3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입장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의원**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재정 규모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급의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그와 관련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몇 가지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지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안은 있습니다라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이 전부개정안 법률이 먼저 개정돼야 그에 근거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훈 의원** 저는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국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월 초에 법안심사소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재정 소요 추계를 정확히 해내지 못한다면, 그 방식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법률 개정, 심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게 규모 자체를, 범위를 짐작하기가 너무 각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법안소위를 논의하실 때 저희들하고 기재부, 그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 각 입장들을 전부 다 제출받으셔서 가지고 거기서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어떤 기준을 정해 주시면 일을 진행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오영훈 의원** 지금까지 과거사 관련된 보상은 일괄지급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4·3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 수가 1만 4256명입니다. 규모가 상당할 텐데요. 저는 일괄지급 방식이 아니라 연금지급 방식 등 다양한 방식, 분할 방식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께서 납득을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의원** 좋습니다.

어제지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저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과거 저희들이,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비극에 대해서 분명히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신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국가의 답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영훈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제주 4·3 진압을 거부하는 의로운 과정에서 희생되었던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어보겠습니다.

이미 의원으로 계실 때 함께 출신학교 차별 금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저는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

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학력 차별과 또 출신학교 차별을 그야말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최근에 사교육비가 급등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29만 원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 배 이상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미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지고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의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화면으로 보시면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에 대한 연도별 변화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른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교육비가 급등하고 있는 내용 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내용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완화를 위해 학력 차별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5%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1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차별에서 가장 심한 차별은 학력과 학벌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잘 유념하셔서 정부 차원에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게 고용노동부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력 차별, 학벌 중심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나 취업 문제에서 공정하고 고졸 취업자나 학력의 제한 없이 능력

중심 채용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교육 정책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환경부나 또 보건 복지부나 관련 분야에서 협력하고 협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가 사회부 총리로서의 역할을 함께 겸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 또 예산에서는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오영훈 의원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실무조정회의를 기획재정부의 차관보가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제도도 저는 사회부총리에 맞게 도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일부 차관보 신설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부총리로서 각 관계부처와의 협업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교육부와 규모가 비슷한 정부의 주요 부처 중에서 차관 1명만 있는 부처는 교육부 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처들은 차관이 2명이거나 차관 1명에 차관보 1명이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차관보 신설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각 부처 간의 협력을 더 강화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도록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영훈 의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 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2013·2018·2020년 차기 쌀 목표가격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농업직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이 아시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제까지의 직불제도는 쌀 중심, 논농사 중심 그리고 그 혜택이 대농에게도

많이 가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주곡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쌀의 과잉생산을 낳고 또 밭농사 또는 밭작물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또 똑같은 작물도 밭에다 재배하면 돈을 적게 받고 논에다 재배하면 돈을 많이 받고 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벽을 털고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그 방향은 정부 내에서도 이미 세워져 있고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농민단체들도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영훈 의원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불금의 재정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 않아도 당정 간에 논의가 있습니다. 약간의 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마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그리고 제주 4·3 특별법의 처리와 관련해서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님의 얘기를 들으셨습니까마는 이 처리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4·3의 문제에 관해서 제주도민들께서 참으로 끔찍한 아픔을 이겨 내시고 그것을 화해로 승화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주도민들께서 이제 마지막 문제로서 배·보상 문제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 현상의 반영으로서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 포함해서 몇 분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심의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관계 부처 간에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진상조사의 과정을 거쳐 2002년 1월 대한민국정부는 처음으로 1712명을 희생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희생자는 1만 4200여 명입니다. 1차로 희생자로 결정된 지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결정되었는데 4·3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4월 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의원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갑 출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4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삼가 운명을 달리하신 쉰다섯 분의 순국용사 여러분에게 한없는 존경과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 중에 정경두 국방부장관께서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북한의 도발을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오늘 오전에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있었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함은 피격된 것이고요 서해에서 벌어진 일들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채익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왜 대통령께서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부러 안 가신 것은 아닐 테고요 오늘 대구에서 있었던 물의 날과 로봇산업 현장을 가시는 것의 일정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익 의원 작년에는 해외 순방한다고 참석 안 했고요 오늘은 협동 로봇 퍼포먼스 행사장에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참석을 안 했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오후 2시부터는 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총리나 내각의 자세가 아니다, 그거는 충분히 행사의 성격상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 눈치 본다고 참석 안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서해에서 희생되신 용사들에 대한 본인의 애절한 심정을 오늘 SNS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채익 의원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존경하신다던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집념을 갖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남남 갈등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치적 화해를 위해 당시 박근혜 당 대표와 화해를 하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전 전 정부 인사들이 투옥되었는데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8·15 광복절에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다마는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만 사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면 법률적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제가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것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의원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까마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지금 불행을 겪고 계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고발됐거나 기소됐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탄핵은 그 이전에 있었고요, 그건 아실 겁니다.

○**이채익 의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사실이……

○**이채익 의원**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양갈음이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나……

○**이채익 의원**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적폐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나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탄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후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채익 의원**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떤 미세먼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노후 석탄발전소 4기 폐쇄 또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때는 가동의 제한, 경유차의 감축, 일부 차량의 제한, 일부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차량의 제한이 주된 대책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 같은 이런 곳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등등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지난주에 미세먼지 관련법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가능해지는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저는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줄이는 것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미세먼지가 없는 최고의 경제성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전은 줄이고 또 지금 LNG라든지 화력석탄발전은 더 늘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삼척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한 지금 온 산천을 파헤쳐서 태양광 하고 하는 이것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탈원전이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탈원전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탈원전이 올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말씀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 발전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2024년까지 발전설비와 발전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줄었어야 옳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전 정권에서 11기의 인허가를 끝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채익 의원** 지금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틀린 것은 말이지요, 2016년도에 원전가동률이 80%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60%대, 65% 정도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이 준 그 부분을 미세먼지가 많은 LNG·석탄화력을 더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전연 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무총리 이낙연** 원전가동률……

○**이채익 의원** 제가 답변을 하라 할 때 말하세요.

2009년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최운열 같은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파열음이 나오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재고할 그런 시점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요 원전가동률이 지난해에 낮았던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부실공사에 따른 원전 정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랬던 것이고요. 그건 원전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님, 최운열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여쭙어보니까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이

라면 정부의 정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의원** 원전가동률이 준 것은 운동권 원전 관련 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보수·안전을 명목으로 해서 가동률을 줄인 겁니다.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원전 안전을 위하는 것이 어떻게 거짓말이겠습니까?

○**이채익 의원** 오늘 국무총리가 말하는 것을 저는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에 배·보상을 해야 할 부분이 한 495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신한울 3·4호기는 법적으로 공사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개시 절차 전에 업계의 관행대로 뭔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지방과는 중앙정부……

○**이채익 의원** 손배상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중앙정부와의 사이에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익 의원** 협의가 아니고, 기업이 지금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정부는 계속 협의만 할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3년째 들어왔는데 아직도 협의할 거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채익 의원** 홍남기 부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 고리 5호기 공론화위 활동은, 그때 공론화할 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한한다 이렇게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다 마쳤다…… 이 말하고 전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낙연** 공론화위원회가 원래 출발할 때의 취지는 지금 이 말씀이 맞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기를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원전은 건설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분명히

지난번 공론화는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한한다고 그렇게 공론화를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신규 원전 6기를 그 당시의 공론화위 여론조사로 밀어붙이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반헌법적이다, 반위헌적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여기 김부겸 장관이나 박상기 장관 두 분은 청와대의 청원에 따라서 버닝썬이라든지 김학의 사건 등 이것 조사에 착수한다 했는데 제 1야당이 지금 44만 명 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왜 이것 답변을 안 해요? 이것 왜 청와대가…… 분명히 20만만 넘으면 대통령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것은 답변 안 해요?

○**국무총리 이낙연** 관계 비서관실에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니까 이 정부를 국민들이 이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한테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것은 답변을 안 하고 말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버닝썬이 정부한테 좋은 것인가요?

○**이채익 의원** 총리는 자꾸 의원의 얘기에 말꼬리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쭙는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 산업부가 심야(경부하) 전기료를 5~10%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것 사실이에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국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는 5~10% 인상한다고 해서 지금 온 기업이 비상사태인데 그것을 국무총리가 아직 몰라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얘기가 작년 폭염 때부터 나와서요 그 문제를 검토하면서 국민의 전기료 부담 총량이 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등등을 궁리하고 있는 것이지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정부는, 산업부는 심야(경부하) 전기료를 5~10%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신문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신문 다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채익 의원** 산업부 발표에 의하면 얘기를 하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요. 그건 산업부한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도라 그러셨는데요 보도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 다.

○**이채익 의원**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이 자연재난이 아니라 정부의 국책사업인 지 열발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정부가 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법적 판단을 보고서 정부의 대응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채익 의원** 포항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국가의 정책에 대한 엄청난 피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재옥 의원께서도 지난 지방선거 전 울산시장 선거 경찰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우 전 수사관도 ‘지방선거 전 울산시장 수사동향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청와대가 야당 광역단체장을 사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면 총리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채익 의원** 그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그것을 국무총리가 엄청난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뭐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장관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채익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낙연** 행안부장관도 보고받지 않은 것을 총리가 일부러……

○**이채익 의원** 어떻게 광역자치단체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데, 공천받는 날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를 안 받고 국무총리도 모르고,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법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를…… 글썬요, 총리까지 보고하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만약 민주당이 지금 야당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정도 국민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무총리로서 국회에 대한 정당한 답변이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낙연** 거짓말을 바라십니까?

○**이채익 의원** 총리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를 지휘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의 대선 특보 조해주가 임명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는 이분이 캠프에 역할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선거관리 쪽의 업무기간이 훨씬 길었다, 그리고 캠프에서의 역할은 별로 없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면 별로 없었다는 것은 있기는 있다 이것을 오늘 인정하는 거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하여튼 저는 오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리님, 허위·과장 보도가 난무하지 않도록 방심위와 선관위 등 관련 부처가 합동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지금 같은 허위 조작 정보의 범람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나 관계기관들이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단지 법적인 제약은 있다는 말을 늘 듣고 있습니다. 저도 불만입니다.

○**이채익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오늘 국민일보를 보면 단독 입수된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울산지방선거 전 경찰

의 정치수사는 하명수사다, 경찰청이 찍어서 이 수사 해라, 하명수사로 드러났고, 검찰에서도 여러 번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김부겸 장관한테도 보고 안 하고 본청장한테도 보고도 안 하고 수사를 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질책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아까 윤재옥 의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일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의원님께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일을 당시에,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지나 청장이 지시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채익 의원** 선거 당시에 황운하 청장과 김부겸 장관, 여당 후보하고 여럿이서 울산에서 회동을 했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채익 의원** 사실이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죠. 제가 무슨 지방청에 방문하는 경우는, 제가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채익 의원** 여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조국 수석이 맡았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정말 지난번 울산지방선거는 도둑맞은 선거입니다. 울산시장선거도 그렇고 남구청장선거도 그렇고 도둑맞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이채익 의원**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울산경찰이 김기현 낙마용 수사를 벌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수사하실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특정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수사의 어떤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했는데 그 점은 일단 불기소결정을 했기 때문에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

니다.

○**이채익 의원** 하여튼 우리 제1야당은 이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이채익 의원** 사회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전범기업 회사의 제품에 표기를 하겠다는 문제와 어린이 안전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화면을 충분히 못 봐서……

말씀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이채익 의원**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계속……

전범기업 표기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이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건 제가 정확한 사실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독립운동의 정신을 우리 학생들과 함양하고 하는 계기수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국무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 경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채익 의원** 울산에는 지금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수소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중소기업청사 건립, 국립산업기술 박물관 건립,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지상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 삼호동·태화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울주군청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호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공공병원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예.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이채익 의원, 인사도 좀 하고 가세요.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먼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그리고 산화하신 천안함 용사 55분의 명예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의 목표가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목표는 역시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자 그리고 누구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정부가 지난 2년간 사회복지 정책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잘 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아쉬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들께서 보이시는 반응을 보면 의료비 경감을 포함한 건강 보장성 강화가 제일 환영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한 노인복지의 증진이 비교적 호평인 것 같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도 잘된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완화되지 못하고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윤후덕 의원 요즘 몇 개의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을 검찰에서 진상조사단이 조사기한을 연장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떠한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고 어떤 억울함이 해원되어야 하는지 총리의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사건이 3개쯤 되니까요. 하나씩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요컨대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힘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도 없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상태가 계속돼 가지고 과연 이걸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의원 자료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 질의서는 단말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 맨 뒤로 좀 가 주세요, 뒤로.

이건 시간에서 좀 빼 주셨으면 좋겠는데……

총리님, 좀 봐 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2008년 6월 24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정권 출범 4개월 만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맨 앞단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여간 진행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선임 추진 상황입니다. ‘선임’이라 하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사표 제출 압박한 추진 상황입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지난 3월에서 6월 중 294개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선임 작업, 즉 사표 받기 작업을 추진한 결과 6월 23일 현재 128명은 선임……

그 밑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대상 294명 중 유임 69곳을 제외한 76.5%인 225개의 기관장을 정권 출범 4개월도 안 되는 그 시점에 밀어냈고 또 밀어내고 있었다라는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그리고 거의 작전하듯이 공공기관의 장을 밀어내고 사표를 받아 내는, 이게 정상적인 것이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렵פות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후덕 의원 여기서 대상자 294명 중 200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무려 84.7%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 당시에 일거에 200명이 자리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글썄요, 그걸 당연시했던 분

위기가 있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 뒷 자료 띄워 주시지요.

이것은 정권 출범 15일 만인 3월 10일에서부터 감사원에서 31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하고 예비 조사를 한 것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며칠 지나지 않은 2008년 4월 7일 모 일간지에서는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감사원, 특정한 짝어내기 감사 논란’.

감사원은 독립 헌법기관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후덕 의원** 그런데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동원해서 공공기관의 장의 사표를 받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게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참 대단한 시대였구나 싶네요.

○**윤후덕 의원** 최근에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관리 감독의 문제를 가지고 언론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보고받으신 적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제가 다 찾아보니까 환경부장관의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근거법인 환경관리공단법 제3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고 또 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이지요. 제5조 2항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행위였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보고받으셨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일반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인사권과 업무에 대한 평가는 동전의 앞뒤 같은 것이지요.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윤후덕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일괄해서 사표를 받아 내고 그런 일을 했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일괄 사표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총리실에도 업무감찰이 있습니다만 그런 직무평가 제도는 또 부처마다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아마 새 정권 들어서고 문재인

정권만큼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을 임기 보장한 정권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거의 전원이 임기까지 근무를 했고요. 임기 넘어서까지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요. 임기 전에 사퇴하신 분이 소수 계십니다.

○**윤후덕 의원** 이 부분을 미국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알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은 스스로 보따리를 싸지요. 우리도 그게 일면 부러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의 연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우리는 우리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윤후덕 의원**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공공기관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고쳐볼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봐요. 미국 방식을 따르는 방식이지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뭔가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기준 없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면 인사권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후덕 의원** 예, 제도 개선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 씨에 의한 성 상납 뇌물사건입니까, 아니면 김 차관과 피해 여성 간의 성폭력 사건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러면 진상조사단이 이 부분에 관한 것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게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재수사 가능성은 조사보고서를 받아 보고 그 안에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윤후덕 의원** 그러면 그런 전제, 그런 가정하에 어떤 수사 방식, 어떤 재조사 방식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문제도 지금 수사 방법에 관해서는 조사보고서를 받아 보고 가장 효과적인, 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좀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의 명예가 걸린 그런 문제로 인식을 하고 만일 수사를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윤후덕 의원** 이 사건이 재수사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 역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후덕 의원**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이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해서는 공통적인 게 특수한 계층에서, 일부 특수 계층에서 벌어진 성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소위 젠더 관련성이 다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성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윤후덕 의원** 거기에 덧붙여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언론 권력에 의해 그리고 그에 기승한 세력들에 의해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이 엉망이 돼 버린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장자연 씨의 유일한 증언인, 윤지오 씨가 이런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13번째 증언’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을까? 시간이 피해자의 고통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해자로 처벌받는 사람은 단 2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는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단죄할 때다’.

진상을 꼭 제대로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사 권력의 수장으로서 더 이상 억울함이 계속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환경부장관님, 미세먼지가 참 심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어느 인터뷰 보니까 장관님 사무실이나 집에 공기청정기 없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의원** 마스크는 쓰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윤후덕 의원** 2개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효과가 없어서?

○**환경부장관 조명래** 청정기 사용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 것도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후덕 의원** 반기문 선배님이, 저희는 정치권에서 선배님이라고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총장님이 범사회적 기구에 흔쾌히 응낙하셨습니다. 범국가 대책기구를 만들었는데, 아예 범사회기구를 만든 것이지요. 이제 뭔가 해결될 실마리가 거버넌스로써는 확보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주영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환경부장관 조명래**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도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8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정파를 초월해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함께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저는 답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 입장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환경부장관님은 옥상옥의 시어머니가 생긴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다층적 거버넌스가 요즘은 선진국에서도 대세인 것 같습니다.

○**윤후덕 의원** 언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이 중국의 상당히 중요한 포럼의 이사장이고 시진핑과 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직위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미세먼지를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보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환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동감합니다.

○**윤후덕 의원** 미세먼지…… 중국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는 별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꼴이 진행이 됐었지요? 중국의 미세먼지의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계절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통상적으로 한 30~50%가 국외 기여분 특히 중국의 기여분이라는 그런……

○**윤후덕 의원**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우리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측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런 정도의 오염원이라는 것을 중국도 동의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미세먼지의 발생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중국에서 우리가 구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에 지금까지 이제 체결한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한중이 함께 합의하는 그런 모델을 운용해서 여러 가지 발생 경로라든가 원인을 발굴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중국을 방문해서, 22일 날 중국 정부가 중국의 30개 도시에 대한 최근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나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비교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난 뒤에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표를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이 실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아주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상단이 중국 베이징의 PM2.5에 대한 농도입니다. 201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35% 정도가 감축이 됐고 믿지 못하시겠다면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중국 베이징의 미 대사관에서 미세먼지를 측정을 합니다. 실제 이것을 공개하고 있지요. 그 수치에도 보면 2013년에 91이었

던 것이 2017년에 63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준 게 아니고 제가 대사관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2013년 25인 게 2017년 25 그대로입니다. 이 기간 중에 중국은 30% 내지 40% 정도의 미세먼지를 줄였어요. 그런데 서울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은 줄이지를 못했지요.

그다음 페이지 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중국은 저렇게 한 30~40% 미세먼지가 내려가고 있는데 한국은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노력을 계속 존중하고 밀어붙여 주면서 우리 자체의 노력이 아주 세밀하게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국민들께 ‘미세먼지 이제 잡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또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PM2.5의 증가라는 것은 일단 우리의 그 배출량 자체가 최근에 와서 줄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현저하게 줄지는 않고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작년과 올해 들어와서는 대기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이를테면 16년의 대기정체 일수에 비해서 18년에 무려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배출량이라도 고농도화되는 이런 경향이 잦아지는 이런 것이 최근에 고농도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3월 1일에서부터 3월 7일까지 무려 7일간 고농도 미세먼지에 휩싸여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무슨 저감대책을 신속히 추진은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이번에 2월 15일 날 처음으로 강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시행된 것이 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달에, 11월 달에 서울시가 시행했던 비상저감조치는 하루에 한 4.7%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강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윤후덕 의원** 민간 차량 2부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현재 특별법에서 차량 운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특히 비상조치 기간 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것은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로 5등급 차량을 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비상저감조치를 우리가 경험 하면서 농도 일수가 잦아지면, 좀 길어지면 그때는 자발적 차량 2부제 같은 것도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윤후덕 의원** 자발적 2부제입니까, 강제 2부제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합의와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2부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윤후덕 의원** 미세먼지 추경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실제 준비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윤후덕 의원**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재부에?

○**환경부장관 조명래**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그 사업에 추정되는 비용들을 집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총액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재난 상태이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번에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러면 재난에 맞게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2022년까지 우리 정부는 30.5%의 저감을 약속했지요? 공약에서는 30%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최근에는 그것보다 더 늘었습니다. 35.8%까지 늘었습니다.

○**윤후덕 의원** 이것을 목표치를 늘리고 이 기간을 좀 당겨야 됩니다. 당기려면 이번 추경에서 집중적이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점이 환경부로서는 좀 아쉽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까지 저희 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쓰고 있는 예산의…… 한 1조에서 약간 모자라는데요 한 60~70%가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그런 관련 예산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22%가 경차이기 때문에 이런 공해차

량을 저공해차량으로 바꾸는 부분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수도권 같은 데서는 미세먼지 저감이 현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있으면 단기간 여러 가지 대책 효과를 기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중요한 소스 중의 하나는 건설장비가 되겠습니다. 건설장비는 일반 경유 승용차에 비해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10.8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건설장비들을 저공해 조치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도 많이 담을 계획입니다.

○**윤후덕 의원** 지금 말씀하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취하고 또 영세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하고 또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니까 단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이 5 대 5예요. 이 5 대 5인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물량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가 25%, 2%, 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벌써 끝났네.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보조금의 비율을 중앙정부가 최소한 70%를 담당하는 그런 추경예산을 짜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제가 그렇게 도와 드릴게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그리고 마지막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안 뜨는 모양입니다. 단말기에 있어요.

제 지역의 환경영향평가가 현실에 좀 안 맞고 또 주민들의 욕구에 안 맞는 그런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잘 좀 들여다보시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3·1 혁명 100주년, 아직도 반민특위를 분열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토착왜구 세력이 존재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5·18 망언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탄핵을 부정하는 제1 야당 대표의 역사 인식 또한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황교안 홍위병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에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출산율이 0.98명으로 0점대를 기록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쏟아부은 200조 원에 가까운 저출생 대책 예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에 몰려들지 않고 지방에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출생 대책이다’.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이 저출생 대책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역 균형발전은 식상한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으로 폄훼되고 있습니다.

스카이 캐슬이 더욱 공고해지는 사회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것이 스펙인 사회 대신 지방이 경쟁력인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지역평등시대로 국가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좋아요.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좋고」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리님, 제가 ‘토착 왜구’라고 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최근에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

특위로 우리 사회가 분열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역사 왜곡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평화당 대변인이 ‘토착 왜구’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우리의……

○김광수 의원 비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반민특위의 무산으로 친일 잔재 청산이 유야무야 된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의 수치스러운 짐으로 남아 있고, 우리 사회의 큰 왜곡을 낳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김광수 의원 저하고 역사인식이 똑같습니다.

역사 왜곡과 폄훼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친일 반민족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극우세력의 뿌리가 친일 반민족 세력일 수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총리께서.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광수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현충원, 그러니까 ‘제1장군묘역’에 안장돼 있는 김백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어렵게 아입니다.

○김광수 의원 어떤 분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친일 논란이 뜨겁게 제기된 분이십니다.

○김광수 의원 항일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아주 악랄하게 탄압했던 간도특설대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간도특설대가 소위 일제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에 의해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한국인이 소탕하게 만든 그런 특설대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묻혀 있는 제1장군묘역은 박정희 묘역 다음으로 서울현충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친일파가 묻힌 제1장군묘역, 2묘역, 3묘역 그 아래에 임정묘역하고 애국지사묘역이 조성돼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발아래에 잠들어 있는 것이지요.

친일파들에게 어찌면 무덤에서까지 억압을 받고 있는 형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러한 왜곡이랄까 역사

의 역전 현상 같은 것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김광수 의원** 제일 위에 있는 심지어 박정희, 창씨개명 명이 다카키 마사오이지요. 여기도 사실 위키백과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충성을 다하겠다고 혈서를 쓰고 만주군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제일 친일파들이 제일 상단에 있고 우리 애국지사 묘역들이 제일 밑에 있는데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부 내부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63명 가운데, 63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반면에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윤봉길·이봉창 의사는 서울 효창공원에 묻혀 계시고 이준 열사, 손병희·신익희·여운형 선생 등 알 만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북한 산 자락에 흩어져서 묻혀 계시요.

반민족 친일행위자들은 국립묘지에 있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은 이렇게 방치돼 있는, 근린공원에 방치돼 있는 현실, 어떻게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 내부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알베르 카뮈가 그런 말을 합니다. ‘과거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 사회의 어찌면 다양한 갈등들이 일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불행한 역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김백일 묘소 옆에 친일행적 단죄비를 세워 놨습니다. 소위 국립묘지에도 이런 작업들이나마 해서 후세의 교훈으로 삼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좀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계속해서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광관 봐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전에 탄핵 직전에 국무총리였지요. 예결위 질의 답변에서 저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일곱 시간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하다. 골든

타임, 그 위중한 시간에, 일곱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최순실과 관련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황 파악하고 부처 보고 듣고 필요한 지시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오전에는 침실에 있었고 오후에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 다 거짓말입니다. 뻔뻔스럽게 이렇게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했는데요, 이것은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정확한 상황을 좀 알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김광수 의원** 다 사실입니다. 화면자료 증거가 다 있는 것이니까요. 아쉽게도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예결위 답변이라든지 본회의장의 답변들은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국회법 좀 개정해야 되겠는데, 개정해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견해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위증을 했을 때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 내부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광수 의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KY 캐슬이 박근혜정부보다도 더 공고해졌어요. 과연 SKY 캐슬, SKY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돼 버렸습니다.

공정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결과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전광관 한번 봐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차관급 185명 중에 SKY 대학 출신이 116명으로 62.7%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특별하게 의식을 하지 않았던가 싶은데요. 완화될 필요가 있고 일부러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 지방 사라질 위기에, 국가적 위기입니다. 결국 학벌주의에 내몰려서 지방 엑소더스(exodus) 행렬에 문재인 정부가 기름칠을 하고 있어요. 이것 좀 고쳐져야 될 건데 이렇게 선후배 끌어 주기, 같은 값이면 선후배 그러면서 인사참사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일부러라도 지방

대학 출신들을 조금씩 안배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잡대’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지잡대’?

○**국무총리 이낙연** ……

○**김광수 의원** 못 들어 보셨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뭐니까?

○**김광수 의원**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입니다. 국내 SNS에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잡대 출신입니다.

쫓달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 경쟁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출생 대책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광수 의원** 유은혜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이 캐슬’ 드라마 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전부 다 본 건 아니고요 일부 봤습니다.

○**김광수 의원** 올해 SKY 대학 입학생 10명 중 4명이 서울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66%가 수도권 출신입니다.

서울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 비율이 얼마인가요? 17%, 17%인데 SKY 대학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전광판 한번 봐 주세요.

또 다른 내용이 9분위·10분위 학생들, SKY 대학을 분석해 보니까 9분위·10분위 말하자면 이른바 상류층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서울 사는 게 스펙이 돼 있고 거의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런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김광수 의원**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 국가적인 존망이 걸린 문제니까 부총리께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대책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앞서 오영훈 의원님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말씀도 하셨지만 우

리 사회가 여전히 학벌·학력위주의, 대입경쟁위주의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아직 이것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나 시스템의 전환이 되고 있지 못해서 그렇게 전환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SKY 대학에 9분위·10분위의 상층이 46%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 대단한, 국가적인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의원님의 지적과 문제인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계층이동 사다리가 완전히 차단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의 불패신화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교육 문제가 핵심이지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두환의 법정 출석 때 ‘전두환 사죄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난 뒤에 베레모를 쓴 극우단체 인사들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겁박하는 집회를 그 앞에 열었습니다. 초등학생, 교사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당연하고요.

○**김광수 의원**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5·18의 현상이었던 광주에서는 아이들이나 교사들이 상처받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일 날에도 관할 광주교육청과 경찰에서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할 교육청과 경찰과 함께 더 대책을 강구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전라도 빨갱이, 5·18 빨갱이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광화문 텐트 농성장, 오월어머님들, 커터칼로 찢어 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위협하는 극우 테러의 단초라고 생각하는 데, 어찌 보면 이게 해방공간에서 서북청년단의 후예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의원님 지적

하신 대로 앞서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제의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렇게 역사적인 왜곡이나 또 잘못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제가 사회부총리로서 아이들에게, 교사들에게 이런 상처받는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과 역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 이것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타당성 검토 용역이 연기됐고 공개도 안 되고 또 뭔가 좀 숨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고민은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가동이 돼 있고요 6월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추진위도 원래 3월에 열렸다는 것이 또 6월로 연기됐어요. 6월에 정상적으로 열리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상반기 안에 방향을……

○**김광수 의원** 이게 객관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서 결정되면 심각한 지역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십니까, 반대 의견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히 인구 100만으로 산정을 했어요. 100만으로 산정했는데, 100만으로 산정하면 서울 외 고양, 수원, 용인 결국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닌가요? 100만에서 1명 모자라면 안 되는 건가요? 성남이 97만인데 성남은 안 되는 건

가요? 이것 주민등록상의 인구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 소재지 가운데 전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66만이지만 실제 생활 인구는 한 93만 6000 정도, 빅데이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울에서 거의 생활하고 지역에서 잠만 자는 곳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정부가 이런 100만을 기준으로 갖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마는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일 기준만으로 해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에는 광역시도 없는 도가 두 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등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가 돼서 이번에 이 법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이런 인구 기준으로만 가면 결국 수도권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시킬 수밖에 없고 지방은 계속 폐허가 됩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미세먼지를 잡는 데 주무장관으로서 실무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일종 의원** 주무장관으로서 각 부처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연계돼 있는 분야의 각 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특별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부처 간 여러 가지 협의 조정이 잘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들은 주무부처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총리님께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러면 총리한테 의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장관으로서 각 부처에 문제가 있는 것 협조 요청하고 한다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두 가지를 다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의원**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성일종 의원** 각 부문별로 미세먼지가 나오는 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 통계가 저희들이 쓰는 것이 2014년, 2015년 통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성일종 의원** 통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오는 곳이, 미세먼지 나오는 이러한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을 갖고 있고 정책도 갖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이 국민들한테 보고할 때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브리핑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확실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성일종 의원** 알겠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와 북한 미세먼지를 다 합해서 국외 요인을 얘기하셨어요. 북한 얘기하실 때 13%의 북한의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KORUS-AQ라고 미국의 우주항공국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 산하에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공동으로 대기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공동조사를 했을 때 북한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를 9%로 분석한 적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9%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성일종 의원** 그런데 왜 장관은 13%라고 발표 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우리 과학원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인근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13%, 14%로 보고 있었는데 그 숫자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대기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북한발 미세먼지가 10% 플러스 정도라는 것은 대개 합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런데 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번에 요청하니까 그러한 자료가 없다고 그러지요? 그런 사실이 없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정확하게 아마 분류를 안 해 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의 미세먼지가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풍향상. 서풍이 불니다. 또는 서북풍이 불니다. 그래서 저 기상도를 보시면 동해 쪽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장관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한테 발표하고 있다, 그러니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환경부장관 조명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우주항공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공동 연구 했을 때 9%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성일종 의원** 공동연구 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조사를 했습니다.

○**성일종 의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15년에 했었습니다. KORUS-AQ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인자들을 가지고 북한에서 왔다고 인정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는 북한에서 쓰는 연료 이런 성격을……

○**성일종 의원** 그게 뭘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런 것들이 이럴테면 생물성 요소들이 많습시다.

○**성일종 의원** 생물성 요소라는 게 뭐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컨대 나무를 때거나 석탄을 때거나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러니까 무능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장관이.

수도권에 SRF를 때고 있는 공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바이오 SRF라고 그래서 식물성 나무목재, 폐목재 이런 것을 때고 있는 SRF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발 미세먼지는 공중에서 비행기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 남쪽에서 태우는 것도 공중으로 올라가지 북한으로 올라갑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래서 공기흐름을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과학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일종 의원** 아니, 장관님. 우리 남한에서도 나무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식물성을 태우고 있습니다. 49개의 SRF 공장이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까지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 정도는 분류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그게, 그러니까 성분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대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 조사에서는……

○**성일종 의원** 아니, 북한 나무하고 대한민국 나무 성분이 다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나무라기보다는 거기서 때는 방식이라든가 연료의……

○**성일종 의원** 그걸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까지는 제가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런데 왜 국민한테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으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KORUS-AQ의 조사 결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성일종 의원** 그러면 장관께서는 누가 어떤 자료를 갖다 줘도 다 그것 돈 줬으니까 믿을 만하

다, 그대로 발표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일종 의원** 이런 것 묻지도 않습니까? 이것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 기상도를 보면 북한 것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기상대에 확인하십시오. 나무 식물성 이 인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SRF 공장에서 태우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게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넘어오는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2017년도 9월 26일 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외 요인으로 북한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어요. 왜 끼워 넣습니까? 지금 인자도 확인을 못 했는데 외국에서 용역 준 것 그 자료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이 미세먼지가 영향이 9%든 13%든 있다, 증명이 안 됐는데 왜 이걸 끼워 넣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KORUS-AQ의 자료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이 KORUS-AQ인가 하는 그 자료만 신뢰할 수 있다고 떠들면 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리고 일부의 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꽤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어떠한 어떠한 요인이 넘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어야지요. 충분히 검토했다면서요?

이걸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장관께서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들은 그 정도의 데이터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든 그다음에 북한발 미세먼지든 심지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원인물질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직도 정확하게 분석 안 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와 방법을 가지고 할 뿐입니다.

○**성일종 의원** 그러니 지금 중국에도 뺄 맞고 어디에도 얘기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에 얘기하려면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국에서 나오는 NOx와 SOx와 유해물질이 몇 ppm인데 서해를 건너면서 자정작용을 거치고 지금 우리나라로 왔을 때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중국하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 알려 주고 있고 제가 2월 달에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을 뵈 때도 분명히 저희들의 연구 결과를 다 보여 줬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러면 중국의 원인으로부터 우리 서해를 거쳐 가지고 백령도와 제주도를 측정 했었을 때 몇 %가 저감됐습니까, 넘어오면서?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까지는 우리가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런데 왜 그러한 자료도 없이 각료가 마구마구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북한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쪽에서 식물성 이러한 인자들에 의해서 북한에서 넘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우고 있는 SRF의 식물성 인자도 충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어요.

평양에 있는 발전소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잘 모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아니, 북한에서 넘어온다 그러면 북한의 발전소가 몇 년 됐는지, 연탄 효율이 얼마인지 정도는 정부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걸 정확하게 소스별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성일종 의원** 북한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북한에서 미세먼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성일종 의원** 그러니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장관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왜 남 탓하냐는 거예요? 지금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정부는 남 탓 정권입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발언할 때도 국외 기여분을 이야기하면서 국외 기여분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를 들면서 북한의 미세먼지 예를 들었던 겁니다.

○**성일종 의원** 국민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누구를 믿고 잠을 잡니까? 환경부장관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원인 정확하게 파악했다면서요?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검토한 후 국민한테 발표한다면서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지금으로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리포트만 자꾸 대답하시고?

○**환경부장관 조명래** 아까 제가 대답을 한 것으로……

○**성일종 의원** 북한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평양에 있는 이 발전소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에 있었던 발전소를 떼다가 평양에 설치한 겁니다. 연탄을 때면 30%밖에 효율이 안 나와요. 북한에서 계속해서 남쪽 정부보고 발전소를 좀 더 보강해 주든지 새로 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이것 넣어 가지고 북한의 발전소 지원을 하기 위해서 9월 26일 자에 북한을 넣은 것 아닌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DMZ 근방에 여러 측정소를 설치해서 더욱더 분석을 할 참입니다.

○**성일종 의원**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장관이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 없이 얘기하신 겁니다, 안 하신 겁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학자들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이 대개 한 10% 플러스 정도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이 누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것을 얘기만 하실 겁니까? 장관님 나름대로 묻고 따지고 정확히 했을 때, 확신이 들었을 때, 예비던스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 때 얘기를 해야지요, 환경인데!

○**환경부장관 조명래** 앞으로 북한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분석하고 측정을 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지금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 LNG로 대체해서 태우고 있습니까, 맞지요? 전력을 생산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성일종 의원** 전체 LNG에서 나오는 2018년도의 미세먼지량이 얼마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분야별로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님, LNG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말씀하시지요.

○**성일종 의원** LNG를 수입할 때 SOx와 NOx를 현지에서 제거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성일종 의원** 왜 청정연료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들은 그것이 미세먼지 배출에서 많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청정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CO₂ 가스가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나오지 않습니다.

○**성일종 의원**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LNG 태우는데 CO₂ 가스가 안 나오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LNG…… 그것은 제가 지금 착각을 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일종 의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CO₂ 가스가 나오고 미세먼지가 나오는 게 1년에 1만t이 나옵니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LNG 태우면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더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조건, 풍향이 좋기 때문에 쉽게 비산과 분산이 되지만 도심지의 것은 비산과 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도심지인들이 다 들이마셔야 돼요.

이 위험한 것을, 원전을 줄이면서 이것을 태운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석탄발전소를 LNG로 바꾸는 것은 도심에 있는 석탄발전소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해안가라든가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의 연료를 지금 LNG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일종 의원** 질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해안가에 있는 석탄발전소보다 도심지에 있는 LNG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 자연조건이 좋은 석탄발전소에서는 비산과 분산이 쉽게 이루어져요. 도심지는 바람이 없잖아요. 바람이 없는 날 LNG를 태우면 여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더더욱 날아가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것을 지

적하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석탄발전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두 기 정도 LNG발전소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것은 도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일종 의원** 도심의 당인리 발전소가 LNG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게 아직 완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사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성일종 의원** 그러면 전국의 LNG발전소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러면 도대체…… 장관이 미세먼지 나오는 원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전제조건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태우고 있는 LNG가 대체인데, 원자력이 준 것만큼 LNG가 거의 다 대체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장관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들이 LNG만 대책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소스에 대한 것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감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업장입니다. 이른바 시멘트, 발전소 그다음에 철강, 석유 정제, 이런 정도를 가장 주된 감축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LNG발전소 같은 것은 지금 발전사업 속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주된 대책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성일종 의원** 제대로 된 환경부장관이라고 한다면 도심지에 있는 LNG에서도 CO₂와 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원자력을 더 넓혀서 이걸 조절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지금 LNG에서 1만t씩 나오고 있는 이 양을 원자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 정책하고 달라도.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탈원전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님, 원인별로 다 파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도심지가.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우리나라에 석유화학단지 몇 개

사가, 주요 대표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사업체 수는 정확하게 제
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한 5만 7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성일종 의원** 아니, 석유화학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래서 지금 총량으로 보
기 때문에 제가 분야별로는 얼마 되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미세먼지가 나오면 큰 공장부터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
니다.

○**성일종 의원** 그런데 지금 석유화학 공장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환경부장관 조명래** 총량으로만 한 630개를 저
희들이 TMS를 달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철강회사는, 큰 제철, 철강은 몇
개나 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30
여 개의 TMS를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러니 못 막는 겁니까. 석유화
학이 59개예요. 59개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제
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저희들이 데이터는 갖
고 있습니다만……

○**성일종 의원** 철강이 48개예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억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의원** 자, 그러면 이 굴뚝부터 나오는
NOx·SOx, 유해물질들을 막아야 합니다. 공장
들 숫자도 모르고 있는데 장관이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실무적으로 지금 CEO입니다. 직원들 시키고
각 부처 오라고 그래서 어느 공장의 굴뚝부터 찾
아가 가지고 막아라라고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
니까? 그래야 예산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전
국적으로 5만 8000개 있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
까? 대통령입니까, 지금?

○**환경부장관 조명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일종 의원** 아니, 장관께서 대통령이지나고
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아닙니다.

○**성일종 의원** 대통령 머릿속에는……

철강을 몇 개 막아야 되는지 석유화학을 몇 개
막아야 되는지 시멘트를 몇 개 막아야 되는지 알
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
는 오염물질이 굴뚝으로 나갑니다. 플레어 스택
(flare stack)이라 그러는 게 있는데, 여기에 오염
물질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 측정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TMS로 측정하고 있고요. 물론 모든 사업장에
다 설치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oT 여러 가지 측정 기술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측정을 하고 있
습니다.

○**성일종 의원** 플레어 스택에 지금 TMS가 달
려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이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까?
불꽃에서 TMS 달려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타지 않고 불완전 연소되고 있는 어
마어마한 NOx·SOx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틀어막아야 되는데, 여기에 TMS를 달 수가 없
는데 다 달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환경부장관 조명래** 630개의 업체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성일종 의원**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잖
아요. 현장을 전연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할 수는 있습니
다.

○**성일종 의원** 구체적으로 장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휘합니까? 대통령은 환경부장관만 믿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이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도
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여기에 OGI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 주세요.

얼마나 유해물질이 나가는지 측정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되는데 빨리 이것 사서 가
지고 측정을 해야 이것을 막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가정용 보일러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 350만 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평균 몇 ppm 나갑니까, 질소가?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들이 350만 대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은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뭐가 있다면 공기청정기 대형으로 하겠다 그랬지요? 5000억 쓰시겠다 그랬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5000억은 그 당시에 그냥 추경예산이었고요, 저희들이 그게 실증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있으면 담아서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5000억을……

○**성일종 의원** 이 정부 쇼만 하는 정권입니다. 그게 가능성 있습니까?

중국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중국 모델은 아니고요 네덜란드 모델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만 실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발표했던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 기술을 개발해서 실증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특히 도심의 제한된 지역들, 이를테면 빌딩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지형·지세가 고농도를 일으키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실증 사업을 통해서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성일종 의원**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것은 전문가 검토에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만 실증 사업을 안 했을 뿐입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은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해주면 그대로 읊어서 국민한테 릴리스합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 담당 부서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거쳤던 결과를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성일종 의원** 참 답답하십니다. 서울에 가정용

보일러 이게 170ppm 나옵니다. 이것부터 빨리 틀어막으세요. 원인별 빨리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번에 그것은 추경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지금 공기청정기 같은 엉뚱한 발상 하시지 말고 지금 당장 막을 것을 찾으세요, 빨리.

지금 암모니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암모니아가 미세먼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암모니아에 대한 연구는 지금 기초연구 정도 단계고요. 미세먼지 발생에 암모니아가 한 13%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암모니아가 PM2.5를 만들어 내는 기제라든가 그 생성 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가 더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대책 과제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참 답답하십니다, 장관이.

암모니아하고 SOx하고 NOx하고 만나면 반응식이 어떻게 나오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제가 화학 전공은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성일종 의원** 기본입니다. 암모니아하고 SO4가 만나 가지고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미세먼지입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래서 13%가 암모니아에 의해서 PM2.5가 생성된다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러면 암모니아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뭐 자연에서도 나오고……

○**성일종 의원** 자연 어디서 나오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자연에서 존재하는 암모니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서는 비료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분뇨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장의 SOx·NOx 이런 데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일종 의원** 공장 어디 공장에서 나오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공장은 뭐 여러 가지 종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님이 현장을 너무 모르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축 분뇨에서 제일 많습니다. 여기 틀어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지금 그런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R&D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R&D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다 나오지.

○**환경부장관 조명래**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암모니아가 PM2.5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부처들과 함께 R&D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에 기초한 효율적인 정책은 저는 곧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제가 인격적 측면이 아니라 장관의 측면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현장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이 어찌 믿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부족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제가 준비한 것 질문도 제대로, 거의 반도 못 했는데……

들어가십시오.

무능한 정부, 쇼 정부입니다, 이 정권은.

장관부터 제대로 현장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부해서 나오는데 대답을 못 할 정도의 각료라고 한다면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만이라도 그런데 다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이 정부의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국회의원들을 믿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쉽게 잠잘 수 있도록 각료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리님,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이미 백서를 냈습니다. 이 백서를 참고하시고 각 부처가 다 함께 이 대책을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주영** 성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전 유성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온천과 과학의 도시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신뢰와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일부에서 최근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는 색깔론과 혐오를 부추기는 극단적인 언어는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색깔론으로 일부 세력을 단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이 질문입니다. 수많은 의혹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되어 버렸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총리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대전현충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같이 참여하고 서울에서 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아까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수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힘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숨어 지내거나 여러 가지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가 정의로운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수뢰 사건인지 또 성폭력 사건인지 아니면 차관의 검증 과정이나 검찰·경찰의 수사 과정 그리고 무혐의처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은폐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 직속상관

이었던 법무부장관이 만약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덮었다면 범죄에 대한 은폐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더 큰손이 이 사건을 덮은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조승래 의원**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물론 이 사건이 어떻게 또 처리되었는지 혹은 은폐되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대한민국에는 특권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학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가 전량 폐기하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조승래 의원** 교학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교과서를 2013년에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배포를 하려고 했으나 전국에서 단 한 곳의 학교만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폐기 수준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출판사는 신입 직원의 단순한 실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전력에 비추어 봤을 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총리님, 이 상황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진상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도 10년입니다.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을 혐오와 조롱, 비하를 위한 패러디의 대상으로 삼아 주지 마십시오. 그만 노무현 대통령을 놓아주시고 영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들어가 주시고요,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하는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3학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승래 의원** 당초에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렇게 앞당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장관 취임하기 이전부터 올해 세수가 좀 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제로 지금 가장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자영업자, 저소득층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에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고등학교 학비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우선정책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급하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고요. 취임하면서 당정청을 통해서 한 학기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에 동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예, OECD 36개 국가 중에 고등학교 학비를 부담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맞습니다.

○**조승래 의원** 그리고 그 학비 부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1년에 한 160만원 정도 되고요.

○**조승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국민들도 다 환영을 하시는 것 같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87% 정도가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일선의 현장에서도 환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는 이 재원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없고요. 다만 재원 분담에 대해서 기재부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예, 협의 결과 뭐 특별한 대안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얘기해야지, 내용을,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이 이미 분담하고 있는 교육급여를 포함해서 부담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이것이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분담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을 지금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4월 초까지는 이게 합의가 되고 또 국회에서 법안 논의도 되고 처리가 되고 또 교육청에서 추정 편성이나 이런 실무적인 절차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더 늦지 않게 부처 간의 합의로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예, 우리는 이미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던 경험과 사례를 갖고 있으니 그 사례를 잘 준용해서 차질 없이 준비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실제로 유치원 유아교육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 현장이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3월 1일부터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게 돼 있던 에듀과인이 100% 다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사립유치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다만 에듀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컨설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020년 3월이면 모든 유치원에서 에듀과인을 적용하고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과 또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지혜를 모으고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승래 의원** 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지난 번에 개학 연기 등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했다가 국민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에 의해서 결국에는 조기에 안정화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아교육 현장을 흔드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국민들께서 사립유치원의 특히 회계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가져 주셨기 때문에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부정이나 비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들께서도 에듀과인 도

입을 찬성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거스르거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발전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렴하고자 합니다.

○**조승래 의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우선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치원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 부의 시행령을 통해서 에듀과인 도입이라든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령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정비들을 조속히 함과 동시에 유치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처우의 문제라든가 또 지역별의 편차라든가 사립유치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3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정말 유감이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신속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안정적인 재정 여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올해로 종료로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조승래 의원** 이 종료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아교육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현장의 굉장히 큰 진통을 겪고 대안으로 마련했는데 3년이 지나서 일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리과정 예산의 충당 방법을 관련

부처 간에 그리고 또 기재부까지 포함해서 시간을 두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몰을 그냥 그대로 일몰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몰 시기를 좀 연장하더라도 그 시기 동안에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 또 국회와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아시는 것처럼 누리과정비는 7년째 22만 원으로 동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조승래 의원** 그래서 실제로 이 동결된 누리과정비로 인해서 유아교육의 질이 많이 또 보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특별회계를 우리가 논의할 때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조승래 의원** 그런데 유아교육특별회계상의 액수를 우리가 2017년도 기준이든 2018년도 기준이든 기준을 동결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19년·20년·21년 이렇게 한시로 3년, 5년 가게 되면 아이들이 주는 만큼 누리과정 교육비는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취지로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이 협의를 잘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누리과정이 벌써 7년째 22만 원으로 동결되고 있어서 현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증액하고 늘려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하는데 이 부분이 항상 보건복지부, 교육부 또 교육청, 기재부까지 이견들이 매번 발생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수, 원아 수가 줄면서 그대로 동결을 하더라도 좀 더 질 높은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방향뿐만 아니라 지금 고교 무상교육도 그렇고요 유아 회계, 누리과정 회계도 그렇고요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잘 실효성을 높이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협의의 과정들이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재정 당국은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만큼 교육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잔인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방향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출산의 깊은 늪에서 우리가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물론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벌써 몇 차례 대선 과정에서도 공통의 공약사항이었기도 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국가교육위원회는 당면한 교육에 대한 불신 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도 잘 아시겠지만 ‘한 지방 세 수능’이라는 것을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조승래 의원** ‘고3은 2009 교육과정에 기존 수능이고, 고2는 2015 교육과정에 기존 수능이고, 고1은 2015 교육과정에 새로운 수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러니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단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게 될 겁니다.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국민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이고 좀 더 비전을 갖는 교육정책들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이제 이관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와 교육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예, 부총리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제가 아까 부총리와 문답하는 것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총리님께 좀 부탁을 드리

고자 모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 문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총리님께서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 또 보육 당국 등과 함께 협의하셔서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또 교육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지 않아도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두 분 사이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두 분 모시고 논의를 붙인 적도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요, 많은 진전이 있고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교부금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는 거의 합의를 했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빨리 좀 합의를 이끌어 주셔서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인데 실제로 사회부총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수단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차관보 신설 등을 통해서 사회부총리 업무를 제대로 보좌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을 갖춰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 않아도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들 간에 업무의 연관성이 강하고 또 예산이라는 무기랄까요,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원활한데 사회부총리에 관계되는 부처들은 업무의 연관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사회부총리께서 강한 무기를 갖고 계신 것도 아니어서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의 많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은 제가 주재하는 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대부분 사회부처들 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유은

혜 부총리님 편에 서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환경부장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까 성일종 의원님하고 문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장을 좀 더 파악하시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수용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그런데 몇 가지 오해들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제작년 석탄 설비가 증가한 게 탈원전 정책 때문인가 이 시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 부분은 앞에서 총리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정부 때 허가됐던 11기가 신설되면서 그게 증가가 됐습니다.

(「아는 게 대체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본회의장을 전세 냈나?」 하는 의원 있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조승래 의원 누가 말이 안 되는 것인지는 보면 알겠지요.

자, 그리고 문제인 정부가 그러면 석탄발전 설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승래 의원 그리고 실제로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상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16년 17년 사이에 석탄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은 11.4%가 늘었습니다만 미세먼지는 25.4%가 줄었습니다. 아까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조승래 의원 그리고 미세먼지는 국내적 요인 국외적 요인이 있을 텐데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내 요인으로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업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40%. 그다음에 건설기기가 한 16%,

그다음에 발전사가 한 14%, 그 밖에 생활 부분의 미세먼지 등등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수도권에서는 좀 성상은 다릅니다.

그다음에 상당한, 또 한 30~50%가 국외 기여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아까 보니까 북한발 미세먼지를 근거로 든 것이 북한에 발전소를 지어 주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여러 번 제가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KORUS-AQ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조승래 의원** 그 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은 우리 국립환경과학원하고 미국의 우주항공 당국하고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다시 또 MOU를 맺어서 올해도 후반기에 다시 추정을 할 겁니다.

○**조승래 의원** 그러면 국외적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나 수단은 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으로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월 23일부터 한 6일 7일 사이에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을 만나서 세 가지를 크게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비상저감을 할 수 있는 예보제를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던 청천 프로젝트라는 측정 중심의 이 프로젝트를 한중 간 대표적인 일종의 브랜드 과제로, 거기에는 측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감 방안까지도 찾는 그리고 실증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실증사업도 특히 지금까지는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했던 것을 보일러 설치장이라든가 이런 소형 사업장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인공강우 실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의를 했던 부분은 각국의 정책의 실정에 맞는 저감 방안을 찾는 것을 논의하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정책협의회는 장관급이 될지 혹은 그 이상이 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조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이런 기술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조승래 의원** 그 시도들에 대해서 실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기술적인 시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맞습니다.

○**조승래 의원**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여러 가지로 지금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야외 공기정화기는 초보적인 검토만 거쳤던 것이고요, 지금은 전문가들 사이에 검토를 좀 더 거쳐서 실증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은 범부처의 R&D 과제로 추진해서 거기에서 실용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기술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민과 관의 R&D라든지 아니면 기술사업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강행규정으로 설치가 곧 됩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인벤토리 구축으로부터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명, 그다음에 기술개발, 국제협력, 그다음에 저감 방안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아마 연구를 하고 실행 방안도 거기에서 연구를 통해서 정책으로 아마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조승래 의원** 미세먼지 대책은 사실은 단순한 대책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주 종합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잘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총리님.

총리님, 혹시 최근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의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인데요, 그 게임물을 등재하는 사이트가 강제로 폐쇄됐다라는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뭔가 등급 분류가 안 됐다는 법령 위반 이유 때문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아주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접근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창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게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게시했다라는 이유로, 등급 분류를 안 했다는 이유로 폐쇄가 된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지 그 창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게시한 친구들의 잘못은 아닌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제도의 미비 또는 제도 운영의 자의성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시대 흐름은 1인 창작물이 증가하고 SNS나 유튜브 같은 것이 마구 늘어나는 세상인데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실제로 이것은 창작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니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잘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라는 게 늘 과거 것이기 때문에요, 더구나 지금처럼 변화가 빠른 시기에 늘 낡은 것이 새로운 것을 막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관계부처와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또 한편으로 지금 게임인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WHO에서 게임 이용에 대한 장애등급 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ICD-11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분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임상 자료도 뚜렷하지 않고 그 예후나 효과가 어떤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급 분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부처의 협업을 통해 논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국제적인 추세라든가 또는 국내 각계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 자신이, 나이 먹은 세대로서 제 기본만 애

기해 봤자 정답을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저 자신도 때로는 누워 있을 때 몇십 분 동안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러면 그 장애에 포함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승래 의원 저는 앞서서 신뢰와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가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포용적 국가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우리 모두 국민과 역사의 편이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조승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 김승희 국회의원입니다.

포퓰리즘으로 일어난 정권은 포퓰리즘으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유자원부국 베네수엘라의 20년 좌파 독재정권이 포퓰리즘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석유자원 가격이 치솟던 한때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베네수엘라였지만 석유로도 감당되지 못했습니다. 그 많던 석유자원을 퍼 주고 수출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복지, 퍼주기식 정책을 펼쳤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이어 간 20년의 좌파 독재정권의 최후는 몰락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좌파 독재정권의 포퓰리즘은 국가경제 파탄을 가져왔고 빈민들의 정신마저 병들게 했습니다.

포퓰리즘의 시작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씁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1야당이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남발한다’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좌파라는 말씀을 남발하고 있다', 어제 포퓰리즘 얘기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승희 의원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닙니다. '좌파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김승희 의원 포퓰리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보통 대중영합주의라고 번역되는 걸로 압니다.

○김승희 의원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서 경제논리에 반해서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승희 의원 저 화면을 일단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뿌리고 보자' '현금 복지 중독' '또 주고 더 주는 지자체' '망국병 부르는 무상복지' 이게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언론 기사 제목입니다.

총리님, 이것이 선심성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모든 언론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의원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 매경도 보고 있고요.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여러 신문을 보니까 어떤 신문들이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김승희 의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는데요,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로수당 차별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와 성동구에 걸쳐서 위치해 있습니다. 중구 어르신들은 공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성동구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출산장려금 그리고 무

상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금 복지가 아파트 주민을 갈라놓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동구청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체해주시길 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승희 의원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그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또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13 지방선거 몇 달 전에 지침을 바꿔 갖고 복지부가 부동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포기라기보다는요 부동의를 재협의로 바꿨지요.

○김승희 의원 그러니까 그게 포기지요.

부동의를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재협의를 그리고 또 협의 완료 이런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8년도에 2017년도에 비해서 현금 복지 사업이 200개나 늘었고요. 돈으로 말하면 무려 3000억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재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기존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도록 하는 것 또는 관련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늘려 가자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는 그 법에 찬성했었는데 지방에 가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비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공공형 산후조리원 하나 하는 데 복지부에서 어떻게 반대하는지 전화로 장관님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해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느꼈는데요. 의원님의 우려하시는

충정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우려가 적어지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희 의원** 복지부에서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김승희 의원** 총리님이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승희 의원** 지금 이렇게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보면 2017년도가 16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했고요. 18년도도 증가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총리님,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알겠습니다.

○**김승희 의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이고 또 세대 간 또 계층 간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율을 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도출하는 작업이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이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유불리를 초월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는 신념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겁한 정부는 이 연금개혁 절대로 이를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바로 그것 때문에 복수 안을, 경사노위에 상정해 있고요. 경사노위에 그걸 전담하는 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의원**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의원** 저도 그렇게 바라는데요.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수 안이 아니라 네 가지 안, 사지선다형 안을 지금 국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제대로 잘 협의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네 가지 안에서 총리께서 생각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을 그렇게 뽑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희 의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PPT 자료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요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비겁한 연금 개편’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사실상 포기’ ‘대통령 한 마디에 후퇴한 국민연금 개혁’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물론 또 아까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대다수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만약에 덜 내고 더 받는 것 또는 더 내고 덜 받는 것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상정도 못 하고 무산됐을 겁니다. 똑같은 언론들이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비판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의원** 어렵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연금개혁의, 물론 반쪽 연금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지만 해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있었는데 복지부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나서, 퇴짜를 맞고 나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금개혁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연금개혁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을 총리께서는 검허하게 받아들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물론 수용하고요. 노력 더 하겠습니다.

○**김승희 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가지 연금개혁안을 보고 20세 청년이 본인이 연금을 받을 나이인 65세 되면 이 네 가지 안이 다, 연금이 고갈됩니다. 연금 고갈된 시기 이후에 받게 됩니다. 연금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면 혼란이 오거나 큰 고통이 따르겠지요.

○**김승희 의원** 고통이 따르겠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승희 의원** 그때 되면 지금 연금을 내야 되는 미래 세대가 자기 봉급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

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희 의원 아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총리님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경사노위의 논의를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대책이 만약에 빠져 있다면 빨리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희 의원 예,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장성 사회보험, 작년엔 몇 개나 적자났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시적인 적자가 건강보험의 경우는 1700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의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다 적자입니다.

왜 적자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보장성이, 말하자면 저소득층을 비롯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건강보험의 경우는 예결위 때마다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국고지원 비율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희 의원 저는 수지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적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적자, 준비금, 기금 고갈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건보에 관해서는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다른 것도 관리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희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 관리 방안은 지금 이번 정부 임기 내의 관리 방안이고요, 다음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관리 방안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의원 ‘핍토’ ‘님토’ 이런 단어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무슨 말씀일까요?

○김승희 의원 ‘플리즈 인 마이 텀 오브 오피스 (Please In My Term of Office)’ 내 임기 안에는 선심 남발하고요. ‘낫 인 마이 텀 오브 오피스 (Not In My Term of Office)’ 계산서는 임기 이후로, 이게 바로 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국무총리 이낙연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승희 의원 잠시 들어가시고요,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침묵의 살인자,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때문에 한 소각장 주변 마을에서 최근 10년 동안에 암 질환으로 60명이 사망했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도 45명이나 된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김승희 의원 있어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지금 봤습니다.

○김승희 의원 그렇지요.

전국의 폐기물 소각시설 몇 개라고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승희 의원 178개가 있고요, 서울에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반경 100m 내에 아파트 단지와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고 또 초등학교까지 있는 곳은 양천구 목동 단 한 군데입니다.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김승희 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고서에 의하면 이 소각시설이 17년 넘으면 유지관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돼서 25년을 경제적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소각장, 설립된 지 30년이 넘었고요, 다시 보장된 지 지금 23년입니다.

이 소각장, 저는 환경부장관이 한번 폐쇄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그 시설의 상태라든가 주변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희 의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희 의원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버닝썬 사건이 이른바 게이트급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윤 모 총경이 2018년 8월부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면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정수석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연관되어 있는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사수석실의 신 모 비서관이 환경부차관을 불러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임명되지 않았다고 야단을 친 혐의로 지금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리님, 요즘 청와대 참모들이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부분적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요즘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누구라고 해서 은폐하거나 비호하거나 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승희 의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가 진행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상상하고 연관시켜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총리께서 대통령께 이 두 수석비서관에 대해서 경질을 고려해야 된다고 충언의 쓴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지금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깐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어느 경우에도 누구를 비호하거나 은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거우십니까?

국민이 기대한 나라는 오늘을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부는 내가 집권하는 동안만이 아닌 다음 정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 정부까지도 지속 가능한 정부입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정부는 몰염치한 정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미래를 보지 않는 정부는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부가 되어 주

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주영 김승희 의원, 제일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광주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의원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78년 본격적인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이었으나 우리에게 준 충격은 가장 컸습니다. 대한민국 지진의 역사는 포항 지진 전과 후로 나뉘게 됐습니다.

포항 지진의 피해 규모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118명의 인명 피해, 850억 원의 재산 피해, 1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설 수가 총 8만 4574건에 달했습니다. 복구비용으로 1800억 원의 비용이 추산되었으며 포항의 공동주택 자산가치 하락은 약 2조 원에 달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수능 도입 이후 재난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포항을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에 총력을 다했고 지진 발생 9일 후인 1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국민들의 성금액 377억 원 이외에도 전국의 1만 585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으며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구호물품들이 포항시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안타까움과 큰 충격 속에서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피해는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고 200여 명의 이재민들은 1년 반이 지나도록 여전히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지진 피해의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항은 지진의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 바로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열발전이 지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로 만들어진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은 실로

놀라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촉발되었다, 포항 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지변이라는 발표였습니다. 사람이 지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이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인공강우 기술로 비를 내리게 한 것도 아닌 지진을 일으켰다라는 놀랍다 못해 엽기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일으켰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W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따라 포항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됐던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그에 앞서 2010년 10월 이 사업과제가 공고되었고 그해 12월 주식회사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고되기 4년 전인 2006년 스위스는 지열발전 사업 중 지진이 발생하자 이 사업을 중단하고 폐기해 버립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위의 스위스 바젤 프로젝트 폐기 등을 예로 들어 포항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큰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포항 지열발전 부지의 과거 50년간의 지진발생 기록을 검토하고 활성단층 유무를 조사하고 미소 지진 규모를 실시간으로 계속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상의 경고와 권고에 대한 어떠한 검토나 조치의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시추작업 중 시추공에 주입된 수천 톤의 진흙물이 단층대의 틈으로 흘러들어 가 사라져 버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시추공이 단층대를 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1차 경고였습니다. 즉시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했어야 했지만 그냥 넘겨 버렸습니다.

2차 경고는 처음으로 시추공에 물을 주입한 2016년 1월에 울렸습니다. 소량의 물을 넣었음에도 생각지도 못한 규모의, 2.1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포항지열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스위스의 페터 마이어 박사가 정밀조사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이 역시 묵살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위험 징후와 경고 속에서도 안전기준은 오히려 완화되어 버렸습니다. 규모 1.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물 주입을 중지하고 기상청, 포항시, 정부, 전담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던 초안을 지진 규모는 2.5로 높인 반면 보고대

상은 정부와 전담기관으로 축소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안전 매뉴얼은 사업자가 정부의 승인과 감독 없이 작성하고 운용했습니다.

안전 매뉴얼이 완화되어 확정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하인 2016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인 2017년 4월 15일 규모 3.1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물 주입이 끝난 직후에 일어난 이 지진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틀 후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이 상황을 정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후로도 물 주입은 계속됐습니다.

(○김정재 의원 의석에서 — 그 이후로 물 주입한 게 언제입니까? 2017년 8월 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2017년 11월 15일 기어이 포항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입지선정도 부실투성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활성단층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김정재 의원 의석에서 — 지진이 촉발된 유발지진입니다. 촉발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물을 넣었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어떠한 단층조사도 없이 사업 장소 및 시추공 위치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형식적인 지질조사를 하였습니다.

(○김정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민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정권 타을 하는 겁니까! 정권 타을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활성단층지역에 국책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습니다.

(「의장님, 제지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부의장 이주영 자, 조용히 경청해 주세요!

○송갑석 의원 충격적인 사실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항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지열발전사업 시추공 위치와 거의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부실한 입지선정으로 결국 예고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재 의원 의석에서 — 3.1 지진 이후에 왜 물을 넣었습니까?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물 넣었습니다! 촉발지진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책임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문재인 정부에서 물을 넣었잖아!」 하는 의원 있음)

또한 부실업체를 지열발전사업자로 선정한 특혜의혹입니다. 선정된 넥스지오 사업자 대표는 해외에서도 최소 8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단기간 내 준공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김정재 의원 의석에서 — 어디다가 포항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부의장 이주영 자, 경청해 주세요.

○송갑석 의원 사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누가 어떠한 이유로 선정하였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어제오늘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시추업체가 돈을 더 받아 내려고 과도한 압력으로 물을 주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넥스지오 대표는 2011년 6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금융 조달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호소합니다. 그 두 달 전인 2011년 4월 산업은행은 지열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성을 검토한 문건에서 선진국보다 시추기술과 국내 지열 자원 데이터가 부족하고 모니터링 기술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넥스지오 대표의 지원 요청에 자원 확보는 전쟁이다, 정부가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재완 당시 기재부장관은 자원 개발에 관한 면책규정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볼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련 기관도 반대한 사업에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의원 의석에서 — 총리님, 나와서 똑바로 답변하세요!)

(「부의장님! 이렇게 의사진행 방해하는 사람 쫓아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부의장 이주영 자, 좀 조용히들 하시고 경청하세요!

경청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송갑석 의원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혹시 '경천동지'가 무슨 말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

을 움직인다는 얘기겠지요.

○송갑석 의원 저는 이번 포항지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고 경천동지라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경천동지하게도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총리께서는 지진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하셨는데요. 바로 다른 재난도 아닌 지진 이후에 포항시민들의 충격은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느낌은 어떠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 자신도 처음 겪는 일이고요, 포항시민들께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포항시청의 상황실 그리고 흥해체육관에 계시는 이재민들 뵙고 주거대책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학교, 대학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대를 봤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포항시민들께서 질서를 지켜 주시고 교회나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인사 드리러 또 한 번 간 기억이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의석에서 — 포항시민 데리고 장난하지 마세요!)

○송갑석 의원 민간에서 국민감사가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형 지진이라는 참사를 발생하게 된 지열발전소 입지선정 배경, 사업 진행 과정 등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는 감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미 작년 11월에 주민들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일종의 국민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를 4월 안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 국민감사청구는 지열발전이 미친 영향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진행 과정, 입지선정 배경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석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정재 의원 의석에서 — 뭔가 개선을 해야지 지금 정권 탓하고 있습니까!)

(「대리질문 좀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좀」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정재 의원 의석에서 —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장내 소란)

○부의장 이주영 조용히들 경청하십시오.

○송갑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닌 명백한 인재지변이었습니다. 국제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시작을 했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수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박근혜정부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업체의 선정 과정 또한 그에 대한 특혜가 매우 의심됩니다. 특히 자원외교 참사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형님 예산의 또 다른 참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 예산의 놀이터가 바로 이명박·이상득 의원의 고향인 포항이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감사, 사법기관 수사 의뢰,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 의석에서 — 어디다가 지금 정권 탓입니까? 분명히 포항시민들로부터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물을 넣었어요. 자료 좀 똑똑히 보세요!)

(장내 소란)

○부의장 이주영 송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 의원(264인)

장길부	장병원	장석진	장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광림	김광수	김기선
김도읍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성환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민	김종석
김중회	김중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해영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후 덕
 이 규 희 이 동 섭 이 만 회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회
 이 춘 석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중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회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제 운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지 상 옥 진 선 미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최 재 성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회

○개 의 시 재 석 의 원 (109인)

강 병 원 강 훈 식 광 대 훈 권 미 혁
 김 광 립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옥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원 김 수 민 김 승 희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해 영 노 응 래 도 종 환
 맹 성 규 문 희 상 박 선 숙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원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형 수 손 금 주
 송 언 석 신 동 근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영 훈
 우 원 식 위 성 곤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상 직
 윤 영 석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이 동 섭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은 재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찬 열
 이 철 회 이 태 규 이 학 재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인 재 근 임 중 성
 장 석 춘 전 재 수 전 혜 숙 정 갑 윤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용 기 정 운 천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제 윤 경
 조 경 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선 미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운 열
 추 미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철 호

○산 회 시 재 석 의 원 (63인)

경 대 수 권 미 혁 김 경 협 김 광 수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부 겸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중 로 나 경 원 도 종 환 민 홍 철
 박 병 석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인 숙
 박 지 원 박 흥 근 서 삼 석 성 일 중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언 석 신 동 근
 신 보 라 심 재 권 안 상 수 어 기 구
 오 영 훈 위 성 곤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은 혜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준 호
 이 규 희 이 양 수 이 정 현 이 채 익
 이 철 회 이 학 재 임 이 자 장 정 숙
 전 현 회 전 혜 숙 정 성 호 정 양 석
 조 승 래 진 선 미 최 연 혜 추 미 애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청 가 의 원 (20인)

장 효 상 김 경 진 김 동 철 金 成 泰
 김 세 연 김 영 춘 김 한 정 김 현 권
 김 현 미 박 영 선 송 영 길 윤 호 중
 이 개 호 이 상 현 이 종 걸 이 종 명
 이 현 승 정 재 호 주 호 영 황 주 홍

○국 회 참 석 자

입 법 차 장 한 공 식
 사 무 차 장 김 수 흥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 석 국 무 총 리 및 국 무 위 원

국 무 총 리 이 낙 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 은 혜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김 부 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	종	환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고용노동부장관	이	재	갑
여성가족부장관	진	선	미
○출석 정부위원			
방송통신위원장	이	효	성

【보고사항】

○의안 제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신창현·어기구·서영교·박홍근·김영주·박찬대·맹성규·전재수·표창원·윤준호 의원 발의)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이찬열·전혜숙·황주홍·이동섭·박찬대·전재수·김종희·신용현·임재훈·이용득·김현아·박주민·유동수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송기현·백혜련·이상현·심기준·이석현·신창현·박광온·이용득·박재호·인재근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송기현·백혜련·이상현·심기준·신창현·박광온·이용득·박재호·김병기·인재근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설훈·정세균·이원욱·유성엽·윤일규·전재수·이개호·정재호·김병기·신창현·김한정·송갑석·박정·서삼석·소병훈·김상희·어기구·심기준·임종성·김철민·이찬열·노웅래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오제세·이명수·전혜숙·이찬열·윤일규·김병관·박덕흠·김영호·이상민·박주민 의원 발의)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협력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

(2019. 3. 21. 천정배·이용호·김광수·전혜숙·장정숙·정동영·유성엽·송영길·조배숙·윤영일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황희·최인호·어기구·홍익표·고용진·안호영·김성수·전해철·박재호·노웅래 의원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황희·김영진·최인호·심재권·어기구·홍익표·고용진·안호영·김철민·김성수 의원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위성곤·김병기·신창현·윤일규·권미혁·정재호·김철민·윤준호·서삼석·김영호·박찬대·박정·제윤경·강훈식·맹성규·최재성·서영교·김현권·김한정·김영주·황주홍·이찬열·노웅래 의원 발의)

이벤트산업 진흥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황희·최인호·전해철·어기구·홍익표·고용진·안호영·김철민·심재권·권칠승 의원 발의)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황희·최인호·전해철·어기구·홍익표·고용진·안호영·김철민·김영진·이훈 의원 발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김동철·채이배·이동섭·한정애·김삼화·김중로·변재일·이춘석·문진국·이찬열 의원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김승희·박맹우·이종배·홍일표·박덕흠·이현재·박순자·전희경·홍철호·김상훈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윤종필·김경진·김명연·김세연·박덕흠·송희경·유재중·이명수·이주영·임이자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윤종필·김명연·박덕흠·박인숙·송희경·신보라·신상진·유재중·이명수·이주영·임이자·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1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철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조경태·문진국·김상훈·엄용수·
김승희·이찬열·박완수·이상헌·김경진·
김세연 의원 발의)

3월 2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서면질문서 제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방치 책임자 규명에 관한
질문서

(2019. 3. 21. 주광덕 의원 제출)